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노동법 개악, 공무원·전교조 탄압, 철도노조 보복

# 정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한국노총, 한나라당, 경총의 ‘야합’ 뒤 한나라당이 12월 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 같았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장석춘 지도부는 굴욕적 타협에 대한 내부 반발을 달래야 하고, 한나라당은 장석춘 지도부를 살려내 정책연대를 이어가야 하며, 경총은 노동조합 완전 무력화를 바라는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풀사나운 다름을 하고 있다. 게다가 추미에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복수노조는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2년 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전제로 타임오프제(유급근로면제시간) 방식으로 내년 7월 시행’이다.

▶ **복수노조 시행 유예:** 복수노조 시행 2년 6개월 유예는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국면에서 법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 포스코·삼성에서 민주노조가 등장하고, 한국노총 작업장에서 더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노조가 등장할 가능성을 노사정 야합으로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조 건설을 꾀한 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꿈도 짓밟히게 됐다.

더불어 교섭창구 단일화는 많은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교섭권 없는 기업별 소수 노조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쓸모없게 만들어 헌법의 노동3권 자체를 침해한다. 아울러 기업 내에 조합될 수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산별지회(지부)의 산별교섭도 무력화한다.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한나라당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업무와 관련한 활동은 근무시간에 할 수 있다(타임오프제). 그러나 이것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해야 하고, 타임오프의 한도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타임오프제 대상 업무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포함한 것을 두고 경영계는 “사실상 무급 전임제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하지만 민주노총은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 조항을 삽입하는 대신 그 내용을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가 제멋대로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제한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기대할 바 없다”고 일축한다.

결국 노동조합 교육, 각종 회의 참석, 상급단체 활동, 일상적인 노조활동, 정치활동 등 넓은 의미의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과 조직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정부·기업주들의 통제에 따라 활동하도록



20만 노동자들이 모인 11월 7~8일 양노총 노동자대회

사진 이윤선

록 길들이려는 것이다.

국회 안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국회 밖에서 민주노총이 투쟁을 벌이면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관련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결론이 날 듯하다. 첫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경우다. 둘째,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는 것이다. 가장 확률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미 24일까지 처리하겠

다고 밝혔다. 셋째, 4대강 예산안, 세종시 수정안 등 굵직한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회가 공전되면서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현행 노조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장석춘 지도부의 굴욕적 타협에 반발하며 ‘합의파기, 재협상,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한국노총 내 금융노조,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의

조합원들이 민주노총과 연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선 투쟁을 펼치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런 투쟁이 부족해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시행령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내년 상반기 충돌이 벌

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입단협 투쟁 일정에 집중해 총력 투쟁을 펼친다는 계획도 논의하고 있다. 이 투쟁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공격에 맞선 투쟁 등과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이 결합해 투쟁이 폭발력을 가진다면 ‘야합은 어겨져 깨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살아날 수 있다.

김명재 함께 노동조합팀

민주당,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결의안 불참

## 민주당의 정부 파병안 묵인을 경계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란 말은 민주당을 위해 발명된 것일까? 이명박이 10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발표했을 때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다가 11월 24일에야 파병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던 민주당이 조급색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2002~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2백 명, 이라크에 3천2백 명, 레바논에 4백여 명을 파병했고 김선일 씨, 윤장호 하사, 샘물교회 교인 등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도 파병 정책을 지속했던 파병 정당의 본색 말이다.

최근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국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해 놓고, 막상 결의안을 제출할 때가 되자 당내 파병 찬성 의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발을 뺐다.

사실, 민주당은 파병 반대 당론을 내놓겠다고 큰소리쳤다가 11월 18일 의총에서 논쟁 끝에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평화유지군은 찬성, 전투병은 반대’라는 잘못된 입장에서 파병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등 뒤통수를



민주당이 공무리를 뺀 파병 반대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사진 이윤선

칠 김새를 보여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민주당의 행동 뒤에는 일관된 노림수가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파병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표를 노린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10년 동안 한국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한 적이 있는 이 나라 지배계급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들은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파병 정책을 통해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해 왔다.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의 파병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이미 우리는 한 차례 파병을 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말하며 과거 파병 정책을 정당화했다. 민주당 의원 조경태 같은 자가 “당리당략 대신 국익을 생각한다면 선택은 자명한 것”이라며 “파병 찬성”을 말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력을 보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인기 관리’ 차원에서 파병 반대 당론을 계속 유지·주장하면서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에 진지하게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혹은, 최악의 경우 은근슬쩍 정부의 파병안 통과를 묵인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런 민주당의 논리를 꿰뚫어 봐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당과의 공조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국방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한 12월 11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주도해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것처럼, 두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독립적으로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의 파병 반대 정서를 거리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용욱 기자 | ohotonge@left21.com





## 세상을 오지명

“북이 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된다” **이명박**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임기] 1~2년 남겨 놓으면 레임덕이 되니까 금년에 열심히 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날까지 ... 하루도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공포스런 이명박

“불과 1~2년 사이에 정상회의에서 나 자신이 받는 대우가 격이 달라졌다. 첫 정상회의 때는 앉아 있다가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외국 정상들이] 내 자리로 와서 자꾸 이야기를 붙인다”

이명박, 별게 다 자랑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병원]하는 분들도 개설지 모르지만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한국에 와서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근데 돈을 못 벌게 하면 누가 오겠나”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피랍 사건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것은 부끄러운 일”

국방부 장관 김태영, 니가 더 부끄럽다

“[이건희 사면이] 국익을 위해서 나쁘지 않을 것”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

국익 = 재벌·부자 이익

“노동운동도 자주적으로 해야 국민 앞에 당당하고 ‘여용’이란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한국노총 위원장 장석춘

“만약 탈레반이 공격해 오면 한국군은 제대로 응징해야 한다. 탈레반이 납치했던 샘물교회 선교단 숫자만큼 복수해 주어야 한다. ... 그때 인질이 풀려난 뒤 설사 철군 계획이 있었다 해도 일부러 철군하지 말았어야 했다”

〈중앙일보〉논설위원 김진

니가 가래! 아프가니스탄

“도둑이 들어도 짓지 않고, 칼 든 자 옆에서 꼬리 치는 개라면 없는 게 낫다. 게다가 지분 좀 있다는 이들은 다 파먹은 김치독을 놓고 싸우고 있다”

〈한겨레〉악병찬 논설위원의 민주당 비판

“학연이다 지연이다 뭐다 하면서 1등 끼리만 다 해쳐먹는 이 드러운 세상!”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나를 슬푸게 하는 세상’ 중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 항의 기자회견 9년간 공개적으로 활동한 단체가 갑자기 '이적 단체'?

사진: 북녘 자유민보

# 좌파를 정치 위기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중앙일보〉가 “세종시 문제 하나도 버거운데 4대강 사업과 교육 개혁, 행정 구역 개편, 공기업 개혁, 노조 문제에 개헌 문제까지 모든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다 보니 어디 하나에 전력투구할 수 없는 것이다. 곳곳에서 소리만 요란할 뿐 뭐 하나 될성부른 게 없다”고 걱정할 정도다.

경제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이명박 자신이 12월 3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인정했듯 “[한국 경제가] 내수나 민간투자 부문에서 아직 불안요인이 많다.”

더군다나 지배자들의 분열과 암투 속에서 터져 나오는 부패 문제는 정권 자체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 도곡동 땅이 이명박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베를루스코니 총리 퇴진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 배경도 부패 문제였다.

## 황당 코미디

심화하는 정치 위기에도 ‘친서민 중도 실용’ 사기극의 악발도 떨어지고 11월부터 노동자들이 대규모 저항에 나서자 이명박은 좌파를 속죄양 삼아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공안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며 ‘공안범죄 과학수사지원센터’를 창설해 마녀사냥의 첨병을 자임했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마녀사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제주통일청년회 사

무실 압수수색에 이어서 〈플러스코리아〉

김휘대 기자가 가택 압수수색을 당했고 승려 서 모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지난 9년간 별 문제 없이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심지어는 “가사 없이 제목과 음원만으로도” 사상성을 표현할 수 있다며 연주곡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는 황당한 코미디를 연출했다. 웹사이트에 북 해개발을 찬양하고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지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광적인 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강력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사방에서 엄습해 오는 위기에 대한 불안과 언제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르는 대중 투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갈수록 탄압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탄압받는 사람들을 적극 방어하며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강철구 다함께 연대협력국



## 노동자 ‘희생’ 없는 쌍용차 ‘희생계획안’

쌍용차 회생계획 수정안이 주요 주주·채권단 회의에서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됐다.

해외채권단은 원금 탕감 비율을 당초 계획인 1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줄이고 현금 상환분 이자도 연 3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올려 주겠다는 수정안마저 거부했다.

해외채권단은 오히려 출자전환 주식의 3대1 감자(자본금 감소) 계획을 취소하고 요구할 정도로 배짱을 부렸다. 회생안이 통과되더라도 쌍용차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쉽게 청산하지 못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이다. 쌍용차에 투자한 주주와 채권단이 자기 몫의 이윤을 얼마나 보장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저들이 말하는 ‘희생’에 노동자들의 ‘희생’은 없다.

상하이차가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는 검찰 발표로 쌍용차 사태에 대한 책임

이 전적으로 상하이차와 정부에 있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파업 농성에 동참했던 조합원 1백26명을 징계하고, 이 중 34명을 해고했다. 쌍용차 공장 안은 강도 높은 노동(시간 당 생산대수가 17대에서 23대로 늘었다)과 관리자들의 횡포로 숨 막히는 공장으로 변한 지 오래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 배짱

노동부 자료를 보면, 쌍용자동차를 그만둔 해고자의 20퍼센트만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쌍용자동차정리해고특별위원회(정특위)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이 공동으로 정리해고자,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1백9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평균부채는 4천3백78만 원이고, 조사대상의 거의 절반이

부채를 갚지 못해 연체 중이다. 1백95명 중 62명은 소득이 전혀 없어 실업 급여, 퇴직금, 은행 대출 등으로 생활하고 있고,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1백50만 원 이하의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파산 등을 통한 부채 청산을 바라고 있다.

살인 진압으로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던 이명박과 사측은 파업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한 게 없다. 법원이 강제인가(희생)를 결정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측과 정부는 원활한 매각을 위해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짤 것이다.

노동자들은 철저히 짓밟으면서 투자금은 한푼이라도 더 건지려고 정부를 물고 늘어지는 채권단과 그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부도 기업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유화로 국가가 일자리를 책

임지라는 요구가 절실한 것이다.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4대강 삼질 예산의 1백10분의 1만 투자해도 쌍용차 전체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다.

현재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정특위를 중심으로 쌍용차 공장 정문 앞 집회 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지난 11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 사태의 주범 상하이차, 정부, 경영진을 즉각 처벌하고”, “징계 철회, 구속자 석방, 복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특위는 오는 30일에 ‘후원의 밤’을 열어 결속력을 다지고 활동 자금도 마련할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해 해고 동지들에게 힘을 줘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 급속노조가 나서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해고 동지들에게 재정 지원, 복직 투쟁 등 연대를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 부자 ‘산타’ 들이 이건희 성탄 사면을 노래하다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같은 재벌과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전 삼성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정권답게 성탄절 또는 신년 특별사면 형식으로 이건희에 대한 사면·복권을 “신속 검토”(법무부 장관 이귀남)하겠다고 했다.

이건희는 삼성 SDS 주식 저가 발행과 조세 포탈로 아들 이재용에게 부를 불법 대물림한 죄가 있었음에도 사법부가 10여 년간이나 재판을 끌어 지난 8월이 돼야 겨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백억 원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나라 지배자들은 이건희가 복역 중인 것도 아닌데 죄가 인정된 지 1백 일도 되지 않은 지금 그를 사면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사면을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사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합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말이다.

올해에만 이명박 정부는 죄 없는 용산 철거민들, 쌍용자동차와 철도 파업 노동자들을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구속했다. 자신의 마지막 보루인 보금자리와 일터를 빼앗긴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노동조건과 대중의 공익을 위해 투쟁한 것은 ‘불법’이라고 탄압하면서,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권력을 매수해 온갖 탈법을 일삼은 이건희를 사면하려는 것은 이 사회의 더러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현실을 보여 준다. 이 건희는 절대 사면돼서는 안 된다.

강영만

| <div><div></div></div>                               |
|------------------------------------------------------|
| <b>급속노조</b>                                          |
| <b>쌍용자동차지부</b>                                       |
| <b>정리해고특별위원회</b>                                     |
| <b>후원의 밤</b>                                         |
|                                                      |
| <b>일시</b><br>2009년 12월 30일(수) 18시                    |
| <b>장소</b><br>경기도 평택시 호남향우회관 (평택터미널 옆<br>기아자동차 건물 4층) |
| <b>후원계좌</b><br>농협 356-0191-3075-93<br>이영호            |



# 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하는 척하다 뒤로는 오히려 대중을 배신하기 일쑤다.

11월 22일 영산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는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박광태, 전남도지사 박준영이 참석해 'MB어천가'를 불렀다. 민주당은 이 둘에 대해 비판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12월 8일 한나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자 민주당은 "원천무효"를 외치며 이를 맹 비난했지만, 예결특위에서는 민주당의 참여 속에 4대강 예산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말뿐인 비난이었던 것이다.

한나라당의 국토해양위 예산 날치기가 끝나기 무섭게 민주당 소속 이낙연이 위원장인 농식품위에서 4대강 예산을 통과시켰다. 입으로만 4대강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위법, 불법행위에 공조하는 공범"(최고위원 박주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당론도 우여곡절 끝에 겨우 결정했다. 그러나 정작 파병 반대 결의안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열심히 파병하던 친제국주의 정당으로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뿐 아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의 죽음으로 주춤했던 친기업·부자 방향의 '뉴민주당 플랜'의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MB 도우미? 민주당 소속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 이낙연이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 형편없는 '투쟁'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근본주의적인 운동권 정당의 티를 벗어던져야 한다"(민주당 의원 김부겸)는 황당한 소리도 들린다.

**"여당이 믿는 건 민주당뿐"**

이러니 "여당이 믿는 건 민주당뿐"

《한겨레》 논설위원 광병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놀랍지 않다.

이런 민주당이 '개과천선'해 이명박에 맞서는 투쟁을 제대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민주당 대표 정세균은 여전히 "한미FTA는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이명박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했다. 또 비정규직악법은 "비정규직 근로

자들에게 최소한의 우산이 되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순기능이 압도적"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근본적 한계와 관련이 있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인 이명박과 싸우기도 하지만 한미FTA, 비정규직, 파병 등 신자유주

의·친제국주의 정책의 근본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왜 민주당과 선을 긋고 진보진영이 단결하는 진보대연합이 절실한지, 왜 그럴 때만 이명박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최근 전 국무청장 한상률이 유임을 위해 정권 실세에게 10억 원의 로비를 했다는 '한상률 게이트'가 터졌다. 이와 엮여 있는 국무청 국장 안원구가 '억울하게' 구속되자 '도곡동 땅 실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폭로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지뢰를 밟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성해운 이사 이재철이 한상률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이재철이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포함된 '로비 리스트'를 제출하니까 검찰이 "다시 리스트를 내려"고 해서 다시 검찰 간부를 제외한 리스트를 냈다는 폭로도 있다(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

이런 검찰이 '도곡동 땅' 등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편이 빠를 것이다. 이미 대선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이명박 특검'마저 '도곡동 땅'에 대해 모두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검찰은 "더 이상 ... 수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안원구 폭로에 대한 수사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관히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 불리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이뿐 아니라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의 비리 의혹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공성진은 스테이트윌서 골프장에 전기 카트차를 공급해 온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스테이트윌서 사건은 "골프장 인·허가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불법·탈법 사례의 집합체"(민주당 국회의원 이석현)라 불릴 정도니 얼마나 많은 부패가 추가로 밝혀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외에도 공성진의 사무실 임대료를 벤처기업이 대납한 의혹이 있고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대선 때부터 시끄러웠던 MB의 도곡동 땅과 BBK 문제

사진 임수현

사단법인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모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명박 도덕성의 아킬레스건인 도곡동 땅 폭로가 나오자 갑자기 '공성진 게이트'가 터져 나왔는데, 이는 검찰의 노골적인 '한상률 게이트' 수사 의지 없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검찰이 여론 내 핵심을 '음침마속'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 정치 위기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한명숙이 인사 청탁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전 대통령은 사장 광영옥은 남동발전 사장 자리를 노리고 한명숙에게 총리 공관에서 직접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아직까지 한명숙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노' 인사이자

'도덕성의 상징'인 한명숙의 비리 혐의를 터뜨린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의도다. 도곡동 땅 문제가 폭로되자 이를 덮기 위해 다른 대형 '비리'를 발표해 몰타기 하려는 것이고,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민생 예산 삭감 등으로 처한 심각한 정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아울러 30퍼센트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한명숙을 공격해 내년 지방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다. 게다가 한명숙은 '친노'이면서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정치적 경쟁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것은 올 초의 노무현 수사와 유사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훨씬 더 부패한 집단이 덜 부패한 집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우리가 진정 궁금한 것은 한상률 게이트의 핵심, 즉 대통령 이명박의 도곡동 땅 의혹이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 월급만 빼고 다 올리려는 이명박 정부

내년에도 "모든 게 다 오르고 내리는 건 월급뿐"이라는 푸념을 해야 할 듯하다. 유류,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에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모두 오를 예정이다.

반면 가게소득은 지난 2 사분기부터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 들어 왔다. 실질소득은 당연히 1년째 줄었다. 노동부가 파악한 올해 노사협약 임금인상률은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임금 소득도 실질적으로 줄었다. 가게 부채 총액은 처음으로 7백조 원을 넘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료를 4.9퍼센트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0.24~0.35퍼센트 올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올릴 계획이다. 경기 위축으로 사회보장성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처럼 위장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여기서도 '친서민' 사기극의 악취가 진동한다.

건강보험료 4.9퍼센트 인상으로 가입자들이 올해보다 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총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내년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겨우 2천17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국가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할 차상위계층 의료 지원을 정부가 건강보험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기금 국고지원 기준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부 책임인 재정 부담을 가입자인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은 1조 원 넘게 줄인 이명박 정부가 실업자가 늘어 고용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

12월 들어 식료품 가격이 모두 올랐다. 각종 식자재의 주원료인 설탕(원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갑절이 됐다. 채소류·육류 등 신선식품 가격은 10퍼센트 넘게 오르고 있다.

한겨울인데 기름값이 다시 뛰고 전기료 인상 '괴담'이 떠돌고 있다. 주택용 도시가스비는 이미 5.1퍼센트 올랐다.

파악한 살림살이 걱정만으로도 병이 날 지경인데, 각종 보험료까지 올린다니 진짜 쓸모없는 정부다.

김문성 기자 | enlucha@left21.com



보즈워스 방북과 북미 회담

#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풀릴 수 있을까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보즈워스의 방북은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둘러싼 북미 간 첨예한 긴장과 갈등에 격정하던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오바마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정상 궤도'를 찾은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정작 보즈워스의 방북 결과는 북미 협상이 매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회담 직후 보즈워스와 북한 당국은 회담이 "매우 유용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몇 달간 물밑 접촉을 통해 조율을 해 왔음에도 6자회담 재개의 구체적 시점과 방식에 관한 합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여전히 평화체제 이행과 관계정상화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의제는 6자회담 틀에서만 논의 가능하다는 '선 6자회담 복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이 쉽게 이 요구를 들어줄지도 미지수다. 보즈워스 방북 직후 미국이 북한발 무기 선적 화물여객기 정보를 태국에 넘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12월 12일치 <뉴욕타임스>를 보면,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미국이 이 사건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제재 등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 처한 위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시간벌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한 협상 끝에 2005년 9·19 공동성명이나 2007년 2·13 합의 같은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북미 관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이런 합의가 항구적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경제지원 의제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 의제는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서 이미 다뤄진 적이 있지만, 미국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합의사항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합의사항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곤 했다.

앞으로의 북미 관계 또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협상과 합의, 합의 파기와 강경 대응 등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이 직면한 위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은 지난 20년간 그랬듯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인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천명하기 위해 언제든지 다시 '북한 위협'을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12월 8일 평양에 방문한 보즈워스를 만나는 북측 환영단

## 평화협정이 진정한 평화체제를 보장하는가

최근 북미 협상 전후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가 높다. 언제든 미국이 북한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이를 막아 보자는 것이다. 강대국들에 의한 강제 분단과 한국 전쟁까지 치른 한반도 민중이 항구적 평화를 바라는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지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근본에서 진정한 평화체제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이 협정조차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사실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것은 정전협정 체제와 같은 '냉전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탈냉전 이후 여러 강대국들이 미국의 지위를 넘본다는 점 때문에, 미국은 동아시아 강대국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삼는 것뿐이다. 따라서 미국은 언제든지 평화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을 위협하려 할 수 있다.

설령 평화협정이 '돌이킬 수 없는' 협정으로 존속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평화협정이 항구적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문제다. 벌써부터 평화협정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북미 간 평화협정을 반대하면서 평화협정 논의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미 미국과 남한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확대하고 영구 주둔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앞으로 단지 북한의 대남 공격에 대항하는 방어 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지역 강대국들을 겨냥해 동아시아 지역에 개입하고 더 나아가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 기지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용산 미군기지를 팽택 기지로 확장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사실 북한조차 평화협정 체결 이후 반드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에 다음과 같이 인터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했다. ... 한반도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주한미군의 구실 변경은 한반도 영토가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을 위한 전진 기지가 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북미 간이든 남북미중 간이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체제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이 북한을 위

협하는 근원적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세계 패권을 위해 강대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체제, 즉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체제를 변혁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패권 경쟁 당사자의 약속에 의해서도, 북한 당국처럼 군사적 경쟁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진보진영이 할 일은 그저 얼마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며 응원하거나, 북한의 군비 증강을 지지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에게는 이런 어긋난 대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체제에 대한 변혁의 씨앗은 오늘날 경제 위기와 전쟁 등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낳는 여러 실패에 대한 대중의 아래로부터 저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진보진영은 이런 저항을 이끌면서 체제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 발전시킬 임무가 있다. 이 과정이 성공할 때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도 가능할 것이다.

## 화폐 개혁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북한이 전격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구화폐와 신화폐를 1백 대 1의 비율로 교환하고, 구화폐 기준 10만 원까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고 한다. 실제 북한에서는 2002년 7·1 조처 이후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했다. 노동자 평균 월급은 3천~4천 원에 불과한데 쌀 1kg 시장가격은 2천 원 수준까지 올랐다. 북한 당국은 이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체제 위기를 초래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남한의 우파들은 북한의 '계획 경제'가 문제라며, 시장 개혁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바로 2002년 7·1 조처와 같은 시장 개혁의 결과물이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단행한 2002년 7·1 조처 자체가 엄청난 물가 인상을 수반했다. 북한 당국은 쌀 1kg 국정가격을 당시 시장가격이었던 44원으로 맞춰 기존에 비해 5백50곱절이나 인상하는 등 엄청난 물가 인상을 단행했다. 반면 노동자 평균 임금도 2천 원으로 고



작 18곱절 인상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다.

시장 개혁의 결과 북한 경제가 근본에서 회복되지도 못했다. 북한 경제는 200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2002년 이후 성장률도 연평균 2퍼센트 안팎 수준이었다. 생산은 여전히 활성화하지 못하고, 물자는 부족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의 '계획 경제'

는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미명 하에 엄청난 돈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투여하는 데 치중했다.

시장 활동은 주로 중국과의 무역에 국한됐고, 이를 통해 시장에 공급된 생필품은 여전히 부족하여 늘 비싸게 팔렸다. 시장 활성화 조처로 점점 국경 가격은 지배력이 약해지고 그 자리를 시장 가격이 대체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2002년 7·1 조처로 물가와 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었던 정부가 화폐 발행으로 비용을 충당하려 하면서 시중에 현금 유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속도를 훨씬 부채질했다. 그 결과 7·1 조처 이후 7년 동안 노동자 평균 임금이 감절도 채 오르지 못하는 동안, 쌀 시장 가격은 40곱절이나 올랐던 것이다.

이번 화폐 개혁이 통화량을 줄여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낮출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필품 공급과 주민들의 실질소득을 늘리지 않고서 화폐 개혁만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벌써부터 화폐 개혁 이후 물가가 진정되지 않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 평균 임금을 책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어떤 보도를 보면, 북한 당국이 애초 노동자 명목임금을 열 곱절가량 올리려 했지만, 이조차 물가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자 그보다 열 곱절 더 올려 신화폐 기준 3천 원 수준으로 책정할 정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도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화폐 개혁은 인플레이션 억제뿐 아니라, 시장 개혁을 통해 형성된 현금 보유자들( 이른바 '돈주')을 통제하고 그들로부터 정부 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듯하다. 현금 교환 비율이 1백 대 1인 데에 반해 예금 교환 비율은 10 대 1로 정함으로써 예금을 유도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화폐 개혁으로 현금 보유자들 전체가 피해를 입지는 않은 듯하다. 실제 현금을 '징발' 당한 쪽은 주로 중소 상인들이 듯하다. 정치와 경제가 긴밀히 융합돼 있는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큰

손'들은 북한 당국과 긴밀히 유착돼 있을 공산이 크고, 이들은 이미 현금을 달러나 위안화로 바꿔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즉, 이번 화폐 개혁으로 북한의 지배 계급은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으면서, 대신 중소 상인들을 쥐어짜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화폐 개혁으로 단기간에 지배계급 내에서 커다란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크겠지만, 당장에 임금이 인상된 노동자들의 불만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화폐 개혁이 북한 체제를 안정화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은 그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라고 자처하는 것과 달리 전제 주민들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계획'이든 시장이든 모두 서방 자본주의와의 군사적 경쟁을 위해 주민 대중의 생활상 필요를 체계적으로 희생하는 데 바탕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민주적 계획과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이런 체제가 노동자들의 필요를 근본에서 충족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코펜하겐 기후정상회담

# 아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세계 지도자들

코펜하겐에서 에스텔 쿠치

코펜하겐 유엔 기후정상회담의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초안은 각 나라와 기업들이 지구를 오염시킬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나라들은 배출량을 50퍼센트나 늘리고도 공식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들은 사용하지 않은 수십억 톤의 '탄소 잔고'를 이월해 다음번 감축 목표를 정할 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 초안은 또한 탄소 상쇄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 즉, 부국이 빈국의 이른바 '녹색' 사업에 투자했을 때 그 대가로 오염 물질을 배출할 권리를 부국에게 주는 것이다. 일부 빈국 정상들은 서방 정부의

미봉책에 항의해 회담장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세계 정상들은 지구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회담을 이용해 자기 나라에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깨끗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8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는 GM을 구제하는 데 무려 6백20억 달러를 투입

했다. 기후변화 대책에 사용한 돈은 이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더구나, 약속한 돈을 실제로 투자한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환경 재앙에 직면해 그들이 보이는 무능은 그들이 유지하려 애쓰는 체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저항의 ‘홍수’가 코펜하겐을 휩쓸다

지난주 토요일[12월 12일] 시위대 10만여 명이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모여 세계 정상들에게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탄압 시도에 굴하지 않고 유엔 기후정상회담에 항의했다. 항의 행동은 지난주 토요일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를 주요 구호로 내걸은 ‘홍수’ 행동과 함께 시작됐다. 시위는 덴마크 의회 앞 대광장에서 시작했다. NGO, 환경주의자,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와 기타 단체들이 이 행동에 함께했다. 행진에 앞선 집회에서는 국제 농민 운동 조직 비아 캄파시나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온 연사들이 발언했다. 도미니크공화국에서 온 비아 캄파시나 활동가 후아나 페레르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바마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들은 아직 내용이 불확실합니다.

“그는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제 기업 집단과 총들을 낳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연사와 참가자들은 지난주 언론에 폭로된 협상 초안의 내용에 분노했다. 그 초안은 부국에게 환경을 파괴할 권리를 주고 빈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덴마크의 사회주의 조직인 ‘인터 나치오날 소살리스트’의 앤 란게는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 부국의 지



국제 농민운동 단체 비아 캄파시나가 코펜하겐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도자들은 ‘우리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당면한 싸움을 회피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덴마크 정부는 국내 항공선을 폐지하고 신고 속도로 건설을 중단하고 당장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환경주의자, 사회주의자와 아나키스트의 단결입니다.” 12월 5일 영국 런던의 ‘물결’ 시위

와 마찬가지로 ‘홍수’에도 많은 학생과 대학 조직들이 참가했다. 스톡홀름에서 온 마틸다 브룬단은 스웨덴 청년 녹색당 회원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우리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보여 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녹색 뉴딜이 필요합니다. 탄소 배출량은 앞으로 몇 년 내에 최소한 30퍼센트 이상 줄여야 합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코펜하겐 중심가에서 정상회담 장소인 벨라 센터까지 6킬로미터를 행진했다. 그러나 덴마크 전투 경찰은 많은 시위 참가자가 다른 길로 가도록 밀어냈다. 경찰은 일부 시위 대열을 고

립시킨 후 새로운 ‘선제 구속’법에 근거를 두고 거의 1천 명(시위 참가자의 1퍼센트)을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의료진의 진찰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손이 뒤로 묶인 채 줄지어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없었다. 그 중 소수는 추방됐으나 대다수는 나중에 석방됐다. 그러나 이런 경찰 탄압은 항의 행동들을 막을 수 없었다. 정상회담이 끝나는 이번 주 금요일[12월 18일]까지 행동과 시위가 계속될 것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번역 김용욱 기자

## 그리스의 위기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

매튜 쿡슨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기자

그리스 경제가 수렁에 빠지자 그리스 정부는 삭감을 피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미래를 보여 주는 것일까? 지금 그리스는 대규모 투쟁을 앞두고 있다. 경제 위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리스 정부는 공공지출을 대거 삭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그리스의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해 12월 둘째 주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낮췄다. 그러자 그리스 증시는 폭락했고 부채에 대한 이자율은 급등했다. 그리스는 10년 전 유로화가 출범한 후 유로 통화권 국가들이 겪었던 위기 중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제2의

아이슬란드나 두바이가 돼 경제가 붕괴할 거라 예측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 통화권을 이탈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는 12.7퍼센트에 달한다. 지난 10월 당선한 영국 신노동당과 비슷한 성격의 그리스 사회당은 내년에 재정 적자를 9.1퍼센트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공공지출이 대거 삭감될 것을 뜻하고, 결국 보통 사람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 임금 삭감

그래서 정부의 계획은 노동자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의 전투적 행동은 전임 신민주당 우파 정부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뒤흔든 바 있다. 그리스의 사회주의 신문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노

스는 이렇게 말했다. “의회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예산 심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 노총은 아직 파업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교사 노조, 건축 노조, 일부 지방 정부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해 다른 노조들은 하루 행동의 날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파업은 알렉산드로스 그리고로폴로스 사망 1주년에 맞춰 다시 한 번 타오르는 학생 운동 대열과 결합할 것입니다. “지난해 이 죽음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당시 신민주당 정부의 위기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12월 6일 1주년 항의 시위에 아테네에서만 5만 명이 참가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항의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에 대한 경찰 탄압은 사람들의 분노를 더 크게 했을 뿐이고 몇

몇 대학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목요일 예산 심의 항의 시위에 학생들도 결합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당이 제출한 삭감안이 앞으로 계속될 추가 삭감의 첫 단계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 달 수입이 2천 유로가 넘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임시직 노동자들이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가들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임금 동결로 충분치 않고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추정 예산을 공고할 때 더 많은 삭감을 발표할 것입니다.” 번역 김용욱 기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토빈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국제 금융 거래에 토빈세를 매겨야 한다는 생각이 드디어 실현되는가? 최근 유엔,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캔터베리 대주교, 로드 터너(영국 금융감독청 청장), 그리고 심지어 유럽연합도 토빈세 부과에 동의를 표했다. 지난주 금요일[12월 11일]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IMF가 연구하게 한다는 브라운과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안이 채택됐다. 지난주 말 <가디언>의 머리가사는 ‘왜 토빈세가 고든 브라운의 업적이 될 수 있는가’였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자제임스 토빈은 원래 1970년대 말에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제안했다. 이것의 주된 목표는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금융 시장 바퀴에 약간의 모래를 뿌려 국민경제와 정부들에게 통화의 태환을 자율화하기 이전에 누리던 단기적 자율성의 일부라도 돌려주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토빈은 세계적으로 통합된 금융시장이 국민국가의 경제적 통제력을 잠식하게 된 상황을 조금이라도 역전시키려 한 것이었다. 그는 1930년대와 제2차세계대전 후 등장한 좀더 조절되는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1990년대 말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등장하기 전까지 철저히 무시돼 왔다. 1998년 프랑스에서 아파티 결성돼 토빈세 도입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 움직임은 다른 나라로 들불처럼 확산됐다. 반자본주의 운동의 폭발적 성장으로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2001년 제노바 시위 후 토빈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검토는 실제 도입 움직임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자 시티[영국 금융가]의 수호자였던 고든 브라운이 결사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 정치적

그럼 고든 브라운은 왜 돌연 마음을 바꿨을까? 그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 때문이다. 주요 서방 국가들은 어마어마한 규모 — 영국은행 조사를 보면, 미국, 영국과 유로화 사용 국가는 14조 파운드[2경 6천5백조 원]를 쏟아부었다 — 의 은행 구제 조치들을 통해 1930년대 규모의 불황이 닥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살아남은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몸집을 가진 은행이 됐다. 이들은 정부의 지급 보증을 통해 확보한 준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엄청난 이윤을 벌 수 있게 됐다. 정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은행가들의 보너스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은행들이 현 경제 위기를 낳은 파괴적 행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위험하다. 은행들의 초과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실제 정치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지난주 영국 재무장관 앨리스터 달링이 은행가들이 2만 5천 파운드[약 4천7백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받는 경우 5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시iting는 난리가 났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조치를 지지했고, 사르코지와 메르켈도 — 메르켈은 마지못해 — 승인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서방 국가들은 갑자기 토빈세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토빈세 활동가들도 권력자들에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가디언>의 보도를 보면, “빈곤 퇴치”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NGO 활동가 데이비드 힐먼이 (1년 전) 도하 고위급 회담에서 한 발표가 결정적 계기였음이 증명됐다.” 예전에 ‘조세정의네트워크’에서 활동했던 데이비드 힐먼은 경험이 풍부한 반자본주의 운동가이자 2004년 런던 유럽사회포럼의 주요 조직자 중 한 명이였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전혀 놀랍지 않다. 토빈세 목표는 애당초 자본주의 타도가 아니라 개혁이었다. 물론, 토빈세 도입 캠페인이 가치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맥락이 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 토빈세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학계 내 주도적 토빈세 옹호자 중 한 명인 헤이키 파토마키는 토빈세가 “금융의 단기 실적주의 문제 자체”나 “세계 정치경제의 신용과 투자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이번 위기의 원인은 토빈이 해결하려 했던 금융시장의 문제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번역 김용욱 기자



#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제안을 지지하며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12월 7일 중앙집행위에서 진보정치대통합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진보진영에 진보진영 재통합에 대한 논의 기구를 제안했다(‘진보정치 희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진보민중 진영 논의기구’).

민주노총은 제안문에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지만 진보적 정치 대안은 취약”한 상태이고 “이 때문에 광범한 반MB 정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 정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리고 이제는 “진보정당 통합을 넘어 진보민중 진영이 정치세력화를 이뤄내야 하고, 모든 것을 열어두고 진보진영의 재통합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제안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맞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진보 세력들이 각개약진해서는 기성 주류 정치권에 맞서 진보적 정치 대안을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구관이 명관’ 논리가 작용했던 것도 분열로 인해 진보진영이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탓이 크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비롯해 진보진영은 진보의 단결을 바라는 대중적 염원과 민주노총의 지극히 온당한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진보정치대통합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진보정치대통합은 단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넘어서 진보적인 NGO, 촛불 시민, 촛불 네티즌에서 급진

좌파까지,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참여하는 되도록 광범한 연합체가 되어 한다. 물론 중요한 두 진보정당들이 진정성을 갖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두고 진보정치대통합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에도 두 진보정당은 진보정치대통합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듯하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2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진보정치대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지만, 그와 동시에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와 반MB연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전개하자는 내용도 결의했다. 분명 진보정치대통합을 향해 중요한 일보를 내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 내부의 이견 때문에 상이한 강조점과 그에 따라 상이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진보신당은 진보정치대통합을 한사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과제로 미뤄놓고 있다.

노회찬 대표는 “전면적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우선 선거에 당면해 있으니 공조의 범위를 넓히고 이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이루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며, 진보정당의 통합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일회적 선거연합(또는 후보 조정)을 하는 것으로는 진보진영의 대안적 정치연합체 건설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 지난 4월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후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9월 10일 '2009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및 수련대회'에서 진보정당 통합을 제안했다.

보단일화를 통해 승리했지만, 그것이 일회적 선거연합으로 머문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부족감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라.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진보의 단결을 바라는 대중의 염원에 적극 부응해 진보대연합 건설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한편, 기성 주류 정치권의 일부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진보정치대연합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가(그 계급 내에서 부차적인 세력이지만) 정당인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을 맺는다

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진보진영의 강령·공약·이데올로기 수준을 민주당의 협소하고 저급한 그것에 맞추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식 ‘진보주의’, 즉 “좌파 신자유주의”(‘제3의 길’)를 추종하는 세력인데, “좌파 신자유주의”는 소위 “진보”의 외피를 두르고 신자유주의와 파병을 추진하다 세계적으로 파산한 ‘제3의 길’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를 재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의 연합은 진보정치대통합의 정치적 비전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진보대연합을 강화해 이를 발판으로 민주대연합을 하자는 주장(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그 자체로는 민주당을 견인할 수 없기 때문에)도 왜 진보대연합이 필요한지를 망각한 것이다. 진보대연합은 반이명박·비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기껏 진보가 단결해 그 힘으로 민주당과 연합하자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치대통합에 근거해 장차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전개하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이 진보의 단결을 바라는 대중의 염원에 진정 부응하는 것이다.

박성환 다함께 운영위원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임시대의원대회가 “진보대통합” 지지를 채택하다

지난 12월 13일에 열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는 내년 지방선거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 대의원대회였다.

진보대연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12월 초 민주노동당 확대간부회의가 진보대통합 방침 등을 결정했음에도 서울시당의 진보대연합 방침이 분명치 않은 상태였기에 진지한 논의의 자리가 절실한 터였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후보 선출 시기와 방식도 주요 안건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에 앞서 연대 방침이 더 먼저 고려돼야 했기에, “지방선거 연대방침 심의의 건”을 다루고 난 뒤 후보 선출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자는 회순 변경 제안(윤성일 대의원)도 다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 선택 사항이나 필수 사항이나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던 ‘지방선거 연대방침(안) 심의의 건’에 관한 토론은 네 명의 패널이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의 진행 방식과 비교하면 신선한 진행 방식이었다. 12월 초 확대간부회의 때 제출된 토론문(진보대연합, 반MB연합,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가 병기돼 있는)이 원안 자료로 제출되었으나 네 명의 패널들이 각각 주요 논점을 주장하면서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각 발표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발표한 정태홍 대의원(민주노동당 서울시당 2010위원회 위원장) 주

장의 핵심을 요약하면, ‘민주노동당의 독자성 강화에 기초해 반MB진보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진보신당과는 통합을 전제로 선거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선거연합은 힘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힘을 강화한 뒤에 민주당이나 진보신당과의 연합을 모색해야 한다’. 그는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를 다른 가치보다 더 우선시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당의 힘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진보대연합은 민주대연합을 위한 하나의 단계이거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선택 사항 중 하나인 듯했다.

김태완 대의원(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반MB연대를 강조했다. “진보정치세력 대통합 추진은 반MB연대연합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침이다.”

김종민 대의원(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진정성을 가지고 반MB 대안으로서의 진보정치대통합을 주장했다. 그는 진보정치대통합에 진보신당뿐 아니라 진보적인 지식인과 촛불네티즌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전에 통합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대연합의 사활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앞의 두 패널들과는 분명히 구별됐다. 그러나 진보정치대통합의 범위에 민주당과 국민참여신당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반MB”와 ‘진보적 대안 의제 및 정책’에 동의하는 제 정당 및 정치세력과 ‘선거연대’를 실현한다.)는 남겨 두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방선거 연대 방침(안)을 토론했고 있다.

김인식 대의원(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위원장)은 진보대연합은 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진보대연합의 범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포함돼야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 신당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진보대연합은 단순히 서울시당 후보조정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의 통합을 통해 전국적 규모로 진보대연합을 건설하고 그 연합체의 이름으로 선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진보의 통합을 원하는 대중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대연합에 참여하는 구성 부분들이 각자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느슨한 형태

의 연합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뒤이은 대의원들의 토론에서도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서울시당 대의원들은 압도적인 지지(1백60명 중 1백20명 찬성)로 지방선거 연대방침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010년 지방선거과정에서 진보적 대중들의 열망을 모아 서울지역 진보적 단체 및 개인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대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확대간부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며 서울지역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3. 향후 서울시당의 세부적인 연대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전당적 토론을 포함한 노력을 기울인다.”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일정 및 방식 확정의 건’은 상당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시장 후보를 추천된 전략후보로 선출하자는 김종민 대의원의 현장 발의안도 부결됐고 이상규 시당 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한 상태의 현재 선출 일정대로 가자는 안도 부결됐다. 그 결과, 사실상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에 입각해 준비돼 온 서울시당 선거 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할 상황이 됐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임시 대의원대회는 진보대통합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1월 초에 열릴 중앙위원회에서도 진보대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된 방침이 결정되기를 바란다.

김어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초구위원회 위원장



## 아프가니스탄 전 국회의원 말랄라이 조야 인터뷰



2009년 8월 이른바 '탈레반' 을 학살한 미군 외국군 증가는 이런 학살의 규모를 키울 뿐이다.

# “더 많은 군대는 더 많은 갈등과 전쟁을 부를 것”

**말랄라이 조야**는(오른쪽 사진)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용감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뿐 아니라 미국이 후원하는 부패한 하미드 카르자이 정부와 탈레반 주도 저항 세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조야는 2005년 아프가니스탄 총선에서 파라주(州)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몇 년 뒤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녀에게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이 정지됐다. 그녀는 여러 차례 목숨을 위협 받으면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전쟁 범죄와 군벌 통치에 반대했다.

조야는 자신의 책 《군벌들 속의 여성: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는 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가 출간된 기념으로 미국 곳곳에서 연설을 했다. 미국 루체대 교수 디파 쿠르마가 그녀를 인터뷰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거기에 부역하는 폭두각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미국의 주장처럼, 그들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해방시켰나요?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9·11 이후 미국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이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 전까지 우리가 프라이팬 위에 있었다면 전쟁 이후엔 불 속으로 던져진 셈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미국은 여성의 권리와 인권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를 점령했고, 아프가니스탄인 수백만 명은 부정, 부패, 치안 불안, 실업, 빈곤 속에 고통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고통은 더 극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지난 8년은 탈레반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절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뒤 미국은 ‘북부동맹’이라 불리는, 여성을 혐오하는 군벌들을 권좌에 앉혔습니다. 탈레반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은 이미 1992년과 1996년 사이 권력을 잡았고, 당시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의 도움을 얻어 양복을 차려입고 다시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은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카불이나 마자리, 샤리프, 헤라트 같은 대도시에서 일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주들에서 여성들은 정말 지옥 같은 상황에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목숨은 새 한 마리의 목숨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도시에서도 여성들은 치안 불안 때문에 대부분 부르카를 씌니다. 저는 부르카가 여성 천대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안전을 위해 그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 역겨운 부르카가 오늘날 여성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죠.

지난 8년 동안 우리 나라 여성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에 누렸던 아주 제한적인 권리조차 다시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그래도 여성들이 어떤 종류의 옷이든 골라 입을 수 있었고 일할 곳이 있었으며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납치나 강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권력을 잡은 군벌들이 여성의 권리를 공격했고 탈레반은 그것을 지속한 것입니다. 미국은 그 군벌들을 다시 복권시켰고, 탈레반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절과 다른 점은 오직 이 모든 범죄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여성을 혐오하는 군벌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강간,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을 감추고 있습니다.

최근 하미드 카르자이가 재선한 아프가니스탄 대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카르자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압둘라 압둘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 아프가니스탄 대선은 미국 정부가 기획한 한 편의 쇼였습니다. 선거를 참관한 국제기구 인사들은 광범한 부정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른바 독립선거관리위원회는 약 1백30만 표가 부정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선거가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지난 8년 동안 민주주의는 거듭거듭 배신당했습니다.

압둘라는 군벌들이 내세운 주요 후보인데, 군벌들이 권력을 잡았던 1992년과 1996년 사이 그의 행적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은 그를 전범으로 여깁니다. 하미드 카르자이가 대통령이었을 때 압둘라는 의회에서 일했습니다. 카르자이는 압둘라 같은 인물들, 또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군벌들과 타협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오늘날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군벌과 마약상, 부패한 관료, 점령군의 비호 아래 치러진 아프가니스탄 대선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원래 있던 당나귀가 새 안장을 달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옛 속담 그대로, “관건은 누가 투표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개표하는가”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약 3만 명을 증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증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더 많은 군대는 더 많은 갈등과 전쟁을 부를 것입니다.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은 전임자 부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부시는 전범입니다. 오바마는 이제 온전한 탈레반을 구슬려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참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탈레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탈레반을 정부에 참여시키려고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부드러운 가면을 씌워 주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민주주의는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전쟁을 통해 획득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에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평범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결코 정적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사과하고 전임자 부시를 국제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또 군벌을 무장시키고 탈레반과 협상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오바마가 지원해야 할 사람들은 이들입니다. 만약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정적하고자 한다면, 오바마와 UN은 탈레반과 군벌들을 지원하는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식을 잃은 미국인 가족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대표해 조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미



국 병사들은 미국 정부 정책의 희생자들입니다. 미국은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원하느라 평범한 미국인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무고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내바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에 맞선 저항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민주적 시민들이고, 다른 하나는 탈레반입니다. 평범한 아프가니스탄인 대다수는 탈레반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탈레반의 저항은 민중의 저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주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저항해 왔습니다. 그들은 점령과 카르자이 정부 모두에 맞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5월 파라 주에서 점령군의 폭격으로 여성과 아이들 약 1백50명이 죽고 난 뒤, 여러 주에서 학생 수천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희생자들에게 연대를 표하고 그들의 죽음에 항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점령에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은 많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카불 등 몇몇 주에서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항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전쟁에 지쳤고 군벌들과 탈레반을 혐오합니다. 그러나 8년 전에 비하면 저항은 확실히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범죄에 맞서 행동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항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곳곳에서 연설을 하며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저의 연설을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서

많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언론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이라크 전쟁은 나쁜 전쟁이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선한 전쟁이라는 것이 그들이 언론을 통해 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들으면, 일부는 울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저에게 다가와 포옹을 하며 지지를 표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저를 포옹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비롯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미국 정부야말로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יי죠.

저는 이곳에서 삶을 즐기고 있는 몇몇 부유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점령을 지지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몇몇 부패한 NGO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들이 맺은 계약과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점령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처지를 공감했습니다.

제가 민주적인 미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부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지지할 수 있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음 네 가지를 시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점령을 당장 중단할 것.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전쟁입니다. 둘째,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사과하고 전임자 부시를 국제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 셋째, 군벌들을 무장시키고 탈레반과 협상하는 것을 중단할 것. 넷째, 탈레반을 지원하는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지원을 중단하게 만들 것.

부디 여러분의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해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출처 미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키〉

번역 조영훈 기자





## 10대 뉴스

### 국내 국제



#### 1 용산 참사와 감사기 사퇴

1월 20일 새벽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여섯 명이 불에 타 숨졌다. 촛불 때문에 미뤄졌던 온갖 개악들을 새해 벽두부터 밀어붙이려던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이 이런 참사를 낳았다. 뼈까지 얼게 하는 물대포와 18개 중대 1천4백 명의 경찰들이 망루를 에워싸고 벌인 진압 작전은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 즉시 항의 운동이 벌어졌고 감사기는 경찰청장에 임명되자마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끝내 죄없는 철거민들을 폭도로 몰았고 법원은 모든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이 끔찍한 참사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싸우고 있다.



#### 4 박종태 열사와 화물연대 투쟁

운송료 30원까지 깎는 사측과 이명박 정부의 '화물연대 죽이기'에 맞서다 박종태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받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하는 열사의 호소에 따른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지배자들을 뒤흔들어 놓았고 이들의 파업 선언은 이명박 정부에게 더한층의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정부와 사측의 한 발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명박은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건설 노동자들에게도 양보해야만 했다.



#### 2 언론 장악 시도와 언론파업

이명박은 한편으로는 경찰을 동원해 저항을 물리적으로 분쇄하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을 장악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다. 특히 당시 팽우병 쇠고기 보도를 한 MBC가 표적이 됐고 MBC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언론 노동자들은 반년 넘게 세 차례의 파업으로 언론악법을 저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끝내 날치기로 언론악법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대리 투표가 있지만 유효하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어설론 타협안을 내민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한나라당이 날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줬다. 그러나 언론 노동자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고 언론 장악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 5 노무현 사망을 계기로 분출한 반정부 투쟁

이명박은 박연차 게이트로 노무현의 도덕성을 공격해 운동 내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눅들게 하려 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죽음으로 사태는 역전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아간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 하는 울분 때문에 무려 5백만 명이 조문을 했다. 6월 10일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이명박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여전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종교인, 학생, 노동자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지만 이명박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청 광장을 봉쇄하고 탄압으로 일관했다.



#### 3 한나라당 재보선 참패와 진보후보의 약진

2009년 4·8 경기도 교육감 선거,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10·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한나라당은 3연패를 기록했다. 특히 10월에는 어떻게든 이겨 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친서민·중도'까지 들고 나왔는데도 패배했다. 이명박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면 언론 보도와 달리 민심은 싸늘했다. 그리고 별로 잘한 것 하나 없는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진보정당이 약진했다. 진보의 단결 가능성을 보여 준 울산 복구 선거가 그랬고 김삼균 후보의 당선도 이를 보여 줬다. 진보진영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대연합으로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정치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 6 쌍용차, 77일간의 영웅적 집회 파업

이명박은 경제 위기의 주범인 기업주들에게는 돈을 퍼주고 피해자들인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을 떠넘겼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유연화가 최대의 국정 과제"라던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표적 삼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따라서 이 투쟁은 단순히 쌍용차만의 투쟁이 아니었다. 당연히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요구 — 예컨대 국유화 — 를 내걸고 싸워야 했다. 정치적 투쟁이 실질적이려면 연대 투쟁도 필수적이었다. 이런 과제들이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쌍용차 투쟁은 고립됐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77일간의 투쟁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고 이런 단호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줬다.

#### 7 공무원노조의 통합이 보여 준 희망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분열을 겪은 공무원노조가 3년 만에 통합됐다. 통합 노조에는 법원노조가 가세해 이전보다 조직이 더 커졌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지독한 탄압에 맞서 단결했다는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 줬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강력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무지막지한 탄압을 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하고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 완강히 맞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지지는 커지고 있다.



#### 8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2차 핵실험, 서해교전

북한 핵은 테러용이고 미국 핵은 평화용이다? 북한이 쏘아올린 것은 미사일이고 남한이 쏘아올린 것은 과학기술위성이다? 북한군이 NLL을 넘으면 도발이고 남한군이 총질을 해대면 건 평화 수호다?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 비랑 끝 전술이고 이명박이 강경하게 나오면 평화 의지다? 대체 이 위선이 언제 끝날까? 미국의 대북 압박은 더 큰 군사적 긴장만 낳을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군사적 경쟁 논리에 종속시킬 것이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 9 4대강 삼질 시작

삼질은 MB의 본능인가보다. 강 바닥에 뭘 숨겨 두기라도 했나? 한반도 대운하는 변신을 거듭해 이제는 복지예산을 뺏아먹는 진공청소기가 됐다. 30조 원이면 용산 철거민들은 족지 않아도 됐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됐다. 무상의로도 당장 할 수 있다. 4대강 삼질은 홍수를 막지도 못하고, 가뭄을 막지도 못한다. 4대강 삼질에 반대하는 투쟁은 자연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투쟁이다.

#### 10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불과 2년 전 평범한 한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끔찍한 기적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명박 정부는 재파병을 결정했다. 아프가니스탄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군은 중무장한 점령군일 뿐이다. 따라서 재파병은 또다시 불행한 죽음을 낳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말은 파병 반대한다고 해 놓고 파병 반대 결의안을 내는 데는 동참하지 않았다. 제국주의 전쟁과 이로 인한 비극을 끝내는 것은 오로지 반전평화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과제다. 대중의 광대 한참을 거리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 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 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하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80년대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운동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 평화 캠페인을 탄생시켰다.



#### 2 "믿습니까? 오바마가 변화를 가져 올 거라고?"

1월 20일 오바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이라크에서는 철군하는 듯 싶었고, 테러와의 전쟁을 중단하고 이란을 포함해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평화의 손을 내미는 듯 싶었고, 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해 미국을 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이 '실연' 것들은 말 그대로 제스처에서 멈췄다. 국민의료보험은 원래의 부실한 안이 우파의 공격으로 완전히 누더기가 됐고, 이란에는 회담을 제의해 놓고 뒤로는 경제 제재를 더 강화했다. 그리고 이라크 철군을 차일피일 미루었을 뿐 아니라, 실상가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확대했다.



#### 3 '오바마의 무덤' 이 될 '아프파' 전쟁

오바마는 당선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 학살군을 증파했고, 파키스탄 정부에 압력을 넣어 파키스탄 정부가 국경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면서 2백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 나이가 오마바는 역결계도, 노벨 평화상을 받는 시점에서 추가 증파를 단행했다. 오바마가 추가 증파를 발표한 12월 3일 '워싱턴포스트'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명실공히 '부시의 전쟁'에서 '오바마의 전쟁'이 됐다"고 평했다. 그리고 '오바마의 전쟁'은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주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다. 나토 회원국과 다른 파병국들은 수렁에 빠져든 전쟁 앞에서 우왕좌왕하지만 쉽게 학살 전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처럼 새롭게 전장에 뛰어드는 철부지 '불나방'들도 있다.



#### 4 유럽 급진좌파의 약진

2월 4일 프랑스에서 반자본주의의 신당(NPA)이 창당 회의를 열었을 때 (파이낸셜타임스)는 NPA 지도자 올리비에 브장스노를 "자본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1백 인" 중 한 명으로 꼽았다. 바로 그 전 주년 1월 29일 프랑스에서 제2차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모든 대형 노동들이 연합해 하루 총파업을 벌인 상황에서 주류 언론들이 발발 때는 것은 당연했다. 물론 6월 유럽연합 선거에서 NPA의 득표율(4.8퍼센트)은 기대에 다소 못 미쳤다. 그러나 8월과 9월 독일 지방 선거와 총선에서 다름게가 다시 한 번 약진하면서 급진좌파의 탄생을 낳은 조건 — 자본가들의 공격이 낳은 분노와 중도좌파의 우경화가 낳은 정치적 공백 — 이 여전히 존재함을 증명했다. 변수는 유럽 급진좌파 조직들이 그 조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다.



#### 5 '저들만의 잔치' 가 된 G20 정상회담

2008년 11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대공황 발생의 공포가 엄습할 때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사람들은 이것이 G8과 달리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잠시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11월 제1차 회담도, 더 기대가 컸던 2009년 4월 런던의 제2차 회담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물론,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G20은 전 세계 빈민들의 공분을 사서 신자유주의의 악당 IMF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G20 국가 정상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전 세계 보통 사람들의 일자라 생활수준 문제가 아니라 이 악당 기구에서 누가 더 발언권을 높이느냐를 둘러싼 것이었다.



#### 6 '돼지 독감' 이 '신종플루' 가 되기까지

올해 초 돼지 독감이 발생했을 때 모두의 머리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돼지가 독감 걸린 거랑 우리랑 무슨 관계지?' '돼지 독감'이란 이름은 의도치 않게 이 병의 기원에 대한 대중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전 세계의 산업화된 축산업의 정당성과 그것을 지탱하는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 마이클 데이비스의 말처럼 '돼지 독감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우리 체제가 어느 정도까지 썩어 문들어져 있는가를 잘 보여 주는 사례'였다. 그래서일까? 돼지 독감은 곧 신종플루로 이름이 바뀌었다. 각각 정부들은 이 질병의 확산에 철저하게 대응하게 대처하면서도 이 질병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을 틀어막는 데는 상당히 유능했다.

#### 7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논란을 불러온 이란 민중 항쟁

6월 12일 이란 대선 투표가 끝나고 불과 한 시간 만에 아흐마디네자드의 압승을 알리는 선거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란 사회의 변화를 바라던 수많은 이란인들이 선거 결과를 의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아흐마디네자드 정부가 이란 노동자 운동과 민주화 활동가들을 탄압해 온 것을 감안하면 우파 정부의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반발은 당연했다. 권위주의적인 아흐마디네자드 정부가 친정부 민병대인 바시지제 파동대와 기관총을 지급해서 시위대를 진압해 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다소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일부 국제 좌파 인사들이 아흐마디네자드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었다. 반대편의 사람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이란인들의 열망을 지지해야 한다고 옹계 주장했다. 이런 논란은 '적(미국 제국주의)의 적(아흐마디네자드)은 내 친구'라는 공식이 얼마나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내는지 보여 주는 계기가 됐다.

#### 8 라틴아메리카 급진화의 미래와 온두라스 쿠데타 반대 투쟁

6월 말 들려온 인구 70만 명의 이 작은 라틴아메리카 나라의 쿠데타 소식에 그토록 큰 국제적 파장을 낳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르헨티나의 유력 일간지 (라 파나)는 이렇게 말했다. "온두라스의 군인들은 파자파 차림의 대통령을 내쫓았다 ... 불과 2년 전만 해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 쿠데타가 다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볼리비아의 분리주의자, 베네수엘라의 기업인 연합, 아르헨티나의 대지주 연합 등이 온두라스의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우익들에게는 실망스럽게도 온두라스 민중은 쿠데타 당일부터 지금까지 반쿠데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 9 중공 국가의 본질을 보여 준 신장자치구 사태

중국 정부의 보도 통제 때문에 7월 13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08년 3월 티베트 민중 항쟁에 이어 중국 국가가 발표한 사회주의를 내세울 뿐 실제로는 소수민족들을 점령하고 탄압하는 진인한 국가임을 여지없이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지금 중국 정부는 할라카 무다 하고 위구르족 '반란자'들을 처형하고 있고, 중국 군인들은 위구르족 거주지를 순시하면서 불심검문하고 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끝없는 수모는 더 큰 저항으로 폭발할 것이다.



# 두바이 파산의 파장이 세계로 번지고 있다

강동훈 기자 kdh@left21.com

12월 14일 아부다비가 두바이에 1백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두바이발 위기는 조금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의 수익성 자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지원받은 1백억 달러는 두바이의 전체 부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여서 시간을 조금 번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두바이 위기는 세계 각국의 국가 채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10퍼센트가 넘는 그리스·멕시코는 이미 국가신용도가 한 단계 하락했고,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 등도 국가신용도 하락 경고를 받고 있다. 세계경제의 핵심인 미국·영국·일본조차 최상위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IMF에 20억 달러의 국제 금융 지원을 추가로 요청했고, 발칸 지역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대출해 온 오스트리아의 대형 은행 HGAA가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국유화됐다. 유럽 금융 시스템이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 경제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세계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공격해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그리스 정부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예산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휘발유·디젤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와 담뱃세를 인상해 세수를 늘리겠다고도 한다. 이 같은 간접세도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의 부담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학생 등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아일랜드 공공노조가 공공지출 삭감에 맞서 파업을 예고하고, 독일에서는 등록금 폐지와 수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기업 민영화로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나섰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삼정로 국가 부채를 대폭 늘리더니 이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좌절시킬 만한 노동자·학생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부실공사로 판명 난 두바이의 '기적'

## 두바이는 MB 식 '삼정 경제'의 미래

두바이 파산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두바이를 칭송하던 보수 언론들은 궁색한 변명을 하느라 바쁘다. 금융 시장 개방, 0퍼센트의 법인세·소득세, 노동자들의 무권리에 기반한 임금 동결 등의 '삼정 경영'은 높이 살 만하지만,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채에 의존한 호황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필연적 결과였다.

그동안 세계 각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서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노동유연화를 추진하고 복지를 삭감해 왔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소득양극화는 심화해 왔다. 이런 모델의 극단이 바로 두바이였다.

기업·부유층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기업·은행 들은 쌓아둔 이윤으로 돈놀이를 할 수 있었지만, 정부 빚은 늘어났고 평범한 사람들은 빚을 내야만 집을 사거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는 보수 언론들조차 부채를 청산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특히 내수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진정으로 소비를 확대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고, 부자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등 기업·부유층의 부를 노동자·서민에게 이전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중이 더는 빚을 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늘려가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 언론이나 이명박 정부 등은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이윤을 훼손하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하는 지배자들은 국가 부채로 위기에 빠진 기업·은행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자·서민에게 이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

대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산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지배자들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기업 이윤을 최우선에 두는 이 사회를 근본에서 바뀌어야 한다.

##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지도부의 배신적 노사정 아합을 비판하다

김상진 한국노총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한국노총 지도부가 지난 4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유예, 노조 전임자 타임 오프제 시행”이라는 배신적 아합을 선택했다. 이명박이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확대하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투쟁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아예 악마와 손을 잡은 것이다. 지도부가 “‘타임 오프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 같다”며 둘러댄 대목은 기가 찰 뿐이다. 무엇보다 복수노조 전면 시행이라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를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모습이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지도부의 선택은 조합원 15만 명이 참가한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이어 80퍼센트 이상의 압도적인 가결을 통한 총파업 선언을 눈앞에 두고 한 굴욕적 배신이라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명분도, 원칙도, 실리도 없이 조합원들의 자존심마저 짓밟은 것이다.

특히, 이번 아합은 한국노총 조합원을 기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노동 탄압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배신한 치욕스러운 타협이기도 하다. 더구나 철도노조가 탄압 속에서도 파업을 벌이고 있던 바로 그때 투쟁전선에 찬물을 끼얹었다.

### 치욕스러운

지금, 한국노총 내에 반발은 상당하다.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한국교통신수노동조합 총연합회(KTF)’를 제외한 장석준 위원장의 출신 연맹인 금속노련을 비롯해 화학노련, 공공연맹, 관광서비스연맹, 정보통신연맹 등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각각 성명서를 내고 ‘노사정 합의 거부, 지도부 총사퇴, 정책연대 파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등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융노조는 “이번 노사정 합의가 한국노총·한나라당 정책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한국노총 정책연대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 방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공동집회를 개최한 공공연맹은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강고한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도부의 독단으로 정부와 아합한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주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현실팍처럼 버렸다”, “여태까지 믿고 따라온 결과가 고작 이거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곳곳에서 나온다. 투쟁의 열기가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한 번 제대로 맞서 싸워 보지도 않고 항복한 것이니만큼 반발과 저항이 거센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아래로부터의 분노와 투쟁의 결의를 모아 실제로 지도부를 총사퇴시키고 밀실아합인 노사정 합의를 무효화하는 일이다. 각 연맹 지도부들과 간부들은 곳곳에서 발표된 분노의 표현들을 모아 행동에 옮기기 위한 실천과제를 제기하고, 시행에 옮겨야 한다.

또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반노동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 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12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했는데 문제는 둘의 결과가 다소 상반됐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재정부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더 수용하고 있고 재 정부는 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두 부처의 공동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KDI의 보고서는 무제한 영리병원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보고서 어디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보건의료단체연합)

“KDI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믿음에만 근거해 보고서를 작성한 듯 보인다. [그러나] 보건경제학의 제1장은 보건의료부문이 의료공급자(의사) - 소비자(환자)의 정보 격차가 너



사진 이은진

무 커서 시장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 분야라는 특성의 서술부터 시작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는 그나마 낫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개인병원 중 20퍼센트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국민의료비가 연간 7천억~2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이동해 중소병원 수급 개가 문을 닫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계산에 넣지 않았지만 영리병원 허용시 비영리병원 의료비가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이고,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때의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사실 이런 연구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를 높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많이 발표됐다. 상식적으로만 따져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충분한 수익(환자 입장에서 의료비)이 보장되지 않는데 굳이 병원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자본가가 있을까? 그러려면 그냥 기부나 하면 될 일이다.

사실 이번 연구 자체가 영리병원 ‘허용’을 전제로 ‘부작용 해소 방안’을 발표하기 위한 쇼였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든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려고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짓 보고서를 기대하며 국책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것이다. 그중 하나는 MB의 의중을 알아챘지만 다른 하나는 애먼 결과를 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앞두고 재정부가 먼저 기자들을 불러 놓고 마치 복지부와 의 경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한 양 KDI 연구 결과만 들이대자 복지부가 반발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반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명박이 ‘서두르지 말라’고 한 것도 지금 ‘전선을 넓히지 말라’는 취지일 뿐이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절대 안 하겠다고 한 대운하를 이름만 바뀌서 기어이 밀어붙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부자와 서민 사이에서 하도 못해 형식적인 중립을 지킬 생각조차 없다.

장호중 기자 rednuc@left21.com



## 진보대연합 — 당 형태의 연합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레프트21〉 20호 ‘진보진영은 대안적 정치연합체를 진지하게 건설해야’ 기사는 진보대연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잘 담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진보대연합에 동의를 밝혔고 지방선거 공동대응 수준을 넘어 “진보통합당”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도 진보진영 통합

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곳에서 진보대연합 논의가 새로운 진보통합당 건설을 염두에 두고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호 ‘당모델이나 공동전선 모델이나’ 기사는 자칫 공동전선이 아닌 당모델 통합은 지지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기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다양하더라도 함께 활동하려면 과거 민주노동당

에서 있었던 패권적 운영을 반면교사 삼아 개방적이고 협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당 형태라 하더라도 이런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서구의 급진좌파 정당들 중에는 “특별한 종류의 공동전선”이라 할만큼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세력들이 함께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올해 9월 독일 총선에서 약진한 디링게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분열했지만 영국 리스펙트도 공동전

선과 정당의 중간 형태 연합체였다. 분당하기 전에 다함께는 민주노동당 내에서 패권적이지 않고 다양한 세력을 인정하는 당운영을 강조해 왔다.

이번 진보대연합 논의에서도 당모델과 공동전선 모델을 대립시키기보다는 정당형태도 열어두면서 다양한 세력이 협력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개방적 운영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선영

파병 반대 기사에 대한 이견

## 진보정당의 국회 안팎 활동도 고무했어야

김덕엽 동지가 〈레프트21〉 20호에 쓴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철회하라’ 기사는 정부와 한나라당뿐 아니라 파병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믿을 수 없는 민주당을 시의 적절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필자가 두 진보정당의

“역부족”을 거론하며 대중의 “직접 행동”만 강조한 것은 다소 아쉽다. 대중의 “직접 행동”이 중요하지만, 국회 안에서 두 진보정당의 단결과 독립적 목소리도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

두 진보정당이 국회 안에서 소

수파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주장처럼 “당장 긴급 의원모임을 갖고 파병동의안 문제에 대해 계속 여론 환기”를 하며 싸울 것을 당부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

지난해 겨울과 올해 초 MB악법 저지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국

회에서 강경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두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공조에 기대지 말고, 대중의 파병 반대 정서가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국회 안팎에서 투쟁하는 게 필요하다.

최영준

지난호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 전략과 전술은 유용한, 그리고 꼭 필요한 개념

〈레프트21〉 독자들의 (정치 활동) 경험이 불균등해 되도록 ‘진절하게’ 기사를 쓸 필요가 있다는 김종환 독자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략과 전술은 “〈레프트21〉만의 내향적 용어”이거나 “은유”가 아닙니다. 또, 그 둘의 구별을 “정도의 차이”쯤으로 보는 것(그렇다고 둘 사이에 넣을 수 없는 만리장성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도 핵심적인 “싸움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술과 전략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술, 즉 전투(부분적 투쟁)에 대한 이론만 있고 전략, 즉 전쟁(전체 투쟁)에 대한 이론이 부재하다면, 우리는 부분적 투쟁들에 골몰하느라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이라는 전체적 시각(전략적 시각)을 놓치게 될 우

려가 있습니다. 또, 부분(전투)의 패배(철도파업)가 곧 전체(전쟁)의 패배가 아닌 것도 허다한데, 전략과 전술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계급 세력 저울을 잘못 이해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분적 투쟁들에서는 때로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과 타협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 세력이 자본가 정당과 국가 권력을 공유할 경우(즉, 전략적 동맹) 필연적으로 노동자 투쟁을 자본주의적 틀 내에 가둬두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적 동맹은 노동자 투쟁에 결정적인 코뚜레를 깨는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프트21〉이 반MB연대연합(계급연합 노선)을 반대하는 까닭입니다.

김민식

## 진보대연합에서도 기본적인 강령 합의는 필요하다

이명하 독자는 19호 내 기사에 대한 편지(‘진보대연합, 서너 가지 핵심 의제를 기준으로 구성해야’)에서 10~20가지 강령 합의조차 너무 타이트하다고 우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나 또한 서너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했지만, 연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면 세부적인 강령은 있어야 한다. 가령, 반신자유주의 중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공기업 민영화 반대·FTA 반대 등은 꼭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 정도 합의도 없이 연합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느슨하다. 단, 그 강령은 어느 한 정파만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진보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노동

당 강령처럼 수백 가지가 아니라 10~20가지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 것이다.

본지가 제안한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은 나름으로 꼭 필요한 요구를 제시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진보대연합의 강령이 돼야만 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어떤 것을 넣고 뺄 것인지는 참가 세력들의 합의에 달려 있다. 또, 강령을 합의해도 독립적 주장을 할 수 있다. 예컨대, 공기업 민영화에 모두 반대하더라도 그 대안이 국유화가 돼야 하느냐 여부는 논쟁할 수 있다. 본지가 제안한 공동전선 모델은 주장과 비판의 자유가 보장돼야함을 전제로 한다.

최미진

##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

20호 독자편지(‘교원평가제에 대한 송재혁 교사의 입장을 지지하며’)를 통해 최일봉 동지는 교원평가제 관련한 내 기사를 비판했다.

우선, 내가 14호, 16호에 쓴 교원평가제 기사들이 양비론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의 교원평가제가 교육에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도입하려는 시도임을 폭로하는 데 강조점을 뒀고, 학생·학부모 들도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을 조건 없이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의 민주적 열망을 무시하

는 태도를 취하는 것에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모든 비판을 삼가고 전교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식으로 비판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쓴 글들이 당면한 정부의 공세를 고려치 않고 투쟁하려는 전교조 교사들을 과하게 비판한 면이 있다고 최일봉 동지가 지적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에 대해 언제나 전교조 비판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최일봉 동지는 학생들의 거대한 운동이 없는 한 교사

에 대한 평가는 선전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진정으로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는 거리가 있을지라도 학생들이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들은 현 체제에서도 도입할 수 있고 또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교권주의적 억압이 유독 강한 현실에서 많은 진보적인 학생·학부모 들이 교사 평가를 비롯한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는 사회 진보의 열망이 담겨 있다.

나는 교육 문제는 — 그것이 교사들의 노동조건과 연관

된 것이라 할지라도 — 학생들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학생들의 자주적·민주적 운동과 의사표현을 지지·고무할 뿐 아니라 교사 운동도 학생 권리의 관점에서 요구를 제기하고 운동을 건설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굳이 유추하자면, 정부와 사측의 공세에 맞서 싸우는 정규직 노동조합을 무조건 지지하면서도, 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단결에 무관심하다면 이를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강동훈

## 구속된 쌍용차 노동자들이 보낸 편지와 연하장

무렵던 여름이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민주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서 춥다추운 겨울에 선거를 치러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지도부를 만들었지요. 힘들게 만든 지도부는 노동자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위해서 첫 출발을 하게 되었지요. 12월 당선 이후 복지 부분의 후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천막을 치면서 우리 투쟁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려진 것은 법정관리였고 법정관리의 회생계획안으로 2천6백 46명이라는 엄청난 노동자의 해고를 요구하며 칼을 들고 우리 목을 향해 왔습니다.

노동자는 욕심이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몇 년을 열심히 하면 집을 사고 몇 년 뒤에 자녀가 크면 학자금 나오는 직장에서 부담 없이 우리 자식들의 학비를 대주는 이런 작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자본은 어비날에 해고자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5월 22일 더위가 시작되는 날 [시작한 점거농성도] 목숨만은 지키겠다고 시작된 물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이 들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여야 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우리의 동지애를 느꼈어요. 그때

쯤 [다함께의] 박설 동지도 만나게 되었지요. 먹을 것도 없이 나누어 먹고 즐겁게 투쟁했죠.

비록 젖어요. 하지만 저는 노동자의 미래를 보았어요. 희망을 보았어요. 민주노조요 희망이요 해도 저는 한 번도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진정한 동지를 보았어요.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해 미안함과 죄스러움으로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벌써 여기에 들어온 지도 녀 달이 지나 2009년을 한 달 남겨 놓고 있네요. 집을 떠난 저는 벌써 아홉 달이 되어 가네요. 가족들 얼굴이 눈 앞에 선해요. 정신적인 고통으로 나약한 나머지 정신과 병원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어요.

미안해요 동지. 하지만 희망을 위해 참으려고요. 버티고 일어나야 하니까. 지금은 나약하지만 나가면 강해질 거예요. 항상 우리의 동지가 있어 힘을 얻고요. 아무쪼록 신종플루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조만희 구속된 쌍용차 노동자 (지면관계상 축약해 실습니다.)



레프트21 편집자님께!

쌍용차 투쟁으로 감옥 살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격주로 보내 주시는 〈레프트21〉 잘 읽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기를 바라며, 그 길에 〈레프트21〉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9일 수원구치소 김동수 드림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 ‘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

올해 총학생회 선거 결과는 훗날이 총학생회 선거 판도를 바꿨던 지난해의 연장선상에 있다.

‘운동권’ 총학생회의 부활과 ‘비권’의 운동권화’라는 지난해 선거의 핵심적 특징은 올해도 나타났지만, ‘운동권’ 총학생회 당선이 올해의 훨씬 더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주요 대학들이 집중돼 있는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대련 등 조직 운동세력이 배출한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해에 당선한 ‘운동권’ 후보들이 올해도 큰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고(한국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지난해 ‘비권’ 경향이 당선했던 연세대, 중앙대, 광운대 등에서는 ‘운동권’ 후보들이 ‘세력 교체’에 성공했다.

올해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를 성사시키고, 비정규 교수 대량 해임을 막아낸 부산대 총학생회는 같은 경향의 선관위가 학생회칙을 어기고 휴학생도 피선거권을 갖도록 제칙을 개정하는 무리수를 뒤 선거가 무산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방의 주요 국공립대 학생회 선거에서도 대부분 ‘운동권’ 후보가 당선됐다.

### 선거 부정 논란의 이면

주류 언론들은 올해 총학생회 선거의 핵심적 특징을 ‘기성 정치판이나 다름없는 선거 부정’으로 꼽으며 핵심을 흐렸지만, 선거 파행은 진보 후보에게 총학생회를 내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비권’ 경향 선관위의 부정행위와 편파적 결정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대에서는 올해 ‘비권’ 총학생회를 운영했던 선관위원들이 패배를 예상하고 표계산을 위해 미리 투표함을 개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진보 성향 선본이 선관위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이들의 대화를 엿들은 것이 문제가 됐지만, 명백히 더 큰 문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선관위쪽에 있었다). 이화여대에서는 ‘기독교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올해 총학생회 출신 선관위원들이 사소한 흠을 잡아 진보 후보를 퇴출시키는 유례 없는 징계를 내려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성균관대 선관위도 진보신당 당원이 선거운동본부장인 선본의 경미한 제칙 위반을 문제삼아 후보 자격을 박탈했는데, 정작 이를 추진한 선관위원과 같은 경향의 후보는 성추행 혐의로 사퇴했다.

### ‘운동권’ 후보의 당선 배경

‘운동권’이 대거 당선한 올해 선거 결과는 전반적 사회 분위기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억압과 기업을 달아가는 대학의 행태는 대학생들의 반감과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이명박의 대표적인 조삼모사식 ‘친서민’ 가면극이었던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 대학들의 등록금 펀드 투자, 진중권 교수 해임, 한예종 사태, 비정규직 강사 대량 해고 등에 맞서 한대련 등 조직된 학생운동이 선두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고, 학생들의 지지를 받았다.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대학 교수들이 주도한 시국선언 물결,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투쟁의 상징이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공장

점거 농성도 학생들이 급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 불신임 운동을 앞둔 부산대 학생 여론조사 결과에서 58퍼센트가 “총학생회가 학생 권익 문제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반대해 정치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올해 총학생회 활동 중 사회참여 활동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고대신문) 조사 결과).

올해 선거 결과는 반정부 정서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강하게 존재했고, 이런 불만을 잘 대변하고 조직하려 한다면 좌파적인 후보가 얼마든지 학생들의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줬다.

특히 ‘비권’에서 ‘운동권’으로 ‘세력 교체’가 있었던 대학에서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났다. 연세대학교 ‘YOU’ 선본은 ‘부자학교 펀드 감시단’, 등록금 인상 반대 활동 등을 주도하며 등록금 문제에서 총학생회나 다름없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좌파의 존재를 선명하게 각인시킨 결과 여섯 선본이나 출마했는데도 31퍼센트나 되는 지지를 얻었다.

중앙대는 올해 두산재단이 들어서면서 학생들과 충돌을 벌인 대학이다. 총장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이다. 이들이 대학을 지배하면서 진중권 교수 해임과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 시도, 교지 수거 사건 등이 벌어졌다. 이것은 상대평가 전면 도입, 총장직선제 폐지, 학내 구조조정 등을 위해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를 막으려는 시도였다. 진보 성향의 ‘강한 총학생회’ 선본은 “두산을 위한 변화냐, 우리를 위한 변화냐” 하는 물음을 던지고 두산 재단

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명하게 밝혀 당선됐다.

### ‘비권’의 좌향좌

‘비권’ 후보들도 ‘운동권’과의 차이만 강조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진보적 목소리를 내고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에서 당선한 ‘소통시대’ 후보는 ‘외부 세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운동권’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도, “등록금만큼은 결코 말랑말랑하지 않”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비권’ 후보로 분류됐던 ‘함께, 멀리’ 후보들도 “총학생회는 ... 대사회적으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통시대’가 ‘소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대상에는 ‘운동권’ 총학생회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도 있었다. 고려대학교 선거에 출마한 네 선본 모두 학내 미화 노동자들의 ‘폐지 투쟁’에 함께했다. 좌파들이 주도한 쟁점이 선거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물론 ‘소통시대’가 투쟁이라는 방식과 학생들의 연대기구인 한대련을 깎아내린 것은 이들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스럽게 만든다. 정부나 사립재단들에 양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통’보다 ‘투쟁’이 필요한 법이다.

연세대학교에서 2년간 총학생회를 운영해 왔고 자신들을 운동권도 비권도 아닌 ‘학생권’이라고 부르는 ‘연세36.5 CON+Action’ 선본도 자신들이 그동안 “복지공약에 치우친 결과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자기반성적 평가를 하며 “사회운동도 하겠다”고 밝혔다.

5개나 되는 선본이 경합했던 서울대의 경우, 모든 후보가 서울대 법인화 반대를 내걸었고, 우파적 목소리를 드러내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어느 대학이든, ‘운동권’이건 아니건 등록금 인상 반대 활동을 하겠다는 공약을 부각시켜야만 하는 압력이 존재했다.

### 진보 후보 설패의 경우

한편, 고려대에서는 좌파가 아쉽게도 낙선했다. 지난해, 2년 만에 ‘비권’ 경향의 총학생회를 제치고 ‘운동권’이 당선해 주목 받았던 고려대에서는 올해 좌파 후보들이 고배를 마셨다.

고려대 다함께는 올해 총학생회를 운

영했던 고려대 ‘반미청년회’ 경향, ‘학생행진’ (이하 행진) 경향에 진보연합선본을 제안했지만, 행진이 거절해 성사되지 못했고 진통 끝에 ‘반미청년회’와 다함께의 연합(‘희망충전’ 선본)만 성사됐다. 결국 좌파는 2위(행진)와 3위(‘희망충전’)에 그쳤다. 행진이 독자적 선전보다 진보적 학생들의 단결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것이 좌파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줄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진보후보들이 받은 표를 합치면 당선한 ‘비권’ 경향의 ‘소통시대’ 지지표보다 훨씬 더 많았다. 즉, 진보단일선본이 출마했다면 당선할 수도 있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좌파 후보가 얻은 총표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고려대의 진보적 활동가들은 낙담하지 말고 지지를 쌓아 나가야 한다.

한편, 올해 총학생회의 지지 기반이었던 곳의 표는 ‘비권’으로 옮겨가지는 않았지만 같은 좌파 내에서도 행진쪽으로 더 쏠렸다. 진보적 학생회 활동가들조차 올해 총학생회가 ‘선봉대식 사업을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래서 ‘비권’이 ‘소통’을 핵심 화두로 내세워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은 좌파가 분명한 진보적 주장과 실천을 회피하지 말고, 필요하면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논쟁도 벌여야 하지만, 동시에 개방적인 태도로 운동을 건설해야 그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 과제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전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운동이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줬다.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위기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도 계속될 것이다.

학생운동은 이런 시도에 맞서 저항운동의 진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억압과 민주주의 문제에 민감한 학생들은 다른 투쟁을 촉발하는 방이쇠 구실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조직된 학생 좌파들이 이 과제를 잘 수행한다면 이명박 정부하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억압감과 분노를 느끼는 진보적 학생들의 지지를 성공적으로 결집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과 마르크스주의 포럼에 초대합니다!

### 사회포럼

서울 동부 사회포럼

신자유주의의 위기인가? 자본주의의 위기인가? — 오늘의 경제 위기 성격과 대안

연사: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공저  
이정구\_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12월 23일 (수) 저녁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회의실(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연락처: 02-447-0397, 010-8439-0502

대전·충남 사회포럼

진보 진영은 왜 베를린 장벽 붕괴를 환영해야 하는가?

연사: 전지윤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23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대전시민아카데미 (사창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연락처: 010-4743-6790

### 마르크스주의 포럼

부산대학교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한국군 재파병

연사: 김덕연\_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기획팀장, 반전평화연대(준) 간사  
일시: 12월 22일 (화) 오후 6시  
장소: 부산대학교 (강의실 추후공지)  
참가비: 없음  
연락처: 010-8367-1710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http://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 신자유주의는 파산했지만 살아남았다

닐 데이비드슨 영국 스트래스클라이트 대학 연구 교수이며 《스코틀랜드 혁명 1692~1946》의 저자다.

2008년 가을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 위기에 빠져들자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시장 질서의 정당성이 의심받았다.

최근 두바이의 금융 위기는 체제가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황혼’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신자유주의의 변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변종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실용적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신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은행의 부분적 국유화 같은 조처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 개혁을 성취하려는 조처가 아님은 분명하다.

변종을 추진하는 자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금융 기관들의 만행이 현재 위기의 원인이라고 비난한다. <뉴스위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다. 금융, 민주주의, 세계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위기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성장을 이루지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지도 못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기업 이윤율의 회복은 일시적이었고 그나마 대단히 불균등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왜 아직도 영향력이 큰가?

19세기 신고전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다.

신고전경제학은 주로 특정 자본가 계급 분파의 이익을 대변했다. 극단적 개인주의를 강조했고, 재화의 생산보다 소비를 중시했다.



2009년 4월 서로 다투다 IMF 강화에만 합의를 본 G20 정상들

어떤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런 태도가 자본가 계급 전체로 확산됐음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언론인 로레타 나폴레오니는 심지어 지배계급이 ‘유한계급’이 된 새로운 ‘황금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과장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빈민과 노동자 들을 희생시켜 개별 자본가들에게 이득을 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 지배자들 상당수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변종

지금 상황은 1970년대 경제 위기 발생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간 듯이 보인다. 거의 35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문제에 동일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고, 그것의 피해자도 동일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곤 한다. 마르크스는 “위대한 역

사적 사건과 위인 들은 한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지배계급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결과는 전혀 웃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처음의 비극이 더 커지고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1970년대 말과 비교해 두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의 초기 집행자들 — 특히, 마거릿 대처나 로널드 레이건 같은 신자유주의 ‘전위’ 정권들 — 은 핵심 목표와 전략 들을 공유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의 후계자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충격에 빠져 일관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단 하나의 사실에 합의하고 있다. 즉, 경제 위기의 대가를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떠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다수 사람들에게 경제 영역은 더 불확실해졌고 정치 영역은 더 의미가

없어졌으며, 사회 영역은 더 파편화하고 문화 영역은 더 수준이 낮아졌다. 인간이란 단지 탐욕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공격에 저항하고 있다.

과거에 자본주의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이른바 ‘일시적’으로 생활수준 하락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을 믿었던 사람도 또다시 속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으로 사회 최상층이 자기 배만 불리고 경제 위기의 재발을 막지 못하는 것을 봤다.

또, 영국 노동당이 자본가 정당의 대안이라는 사고는 12년간 지속된 노동당 정부의 ‘사회적 자유주의’ 아래 타격을 입었다.

이런 변화로 사람들은 끔찍한 경험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의식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좌파가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말이다.

번역 김용욱 기자

오늘날의 급진 사상가들 ② 알랭 바디우

## 추상적 관념은 ‘사건’을 현실로 만들 수 없다

오늘날 급진 사상이 시리즈 두 번째 칼럼에서 영국의 사회주의자 조너선 몬더가 알랭 바디우(사건)의 철학을 살펴본다.

지난 호에서는 안토니오 네그리의 사상을 살펴봤다. 네그리는 “다중”이 자본의 권력을 끊임없이 압박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급진적 변화를 예외적인 것으로 본다. 즉, 기존의 지배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사건”을 통해 급진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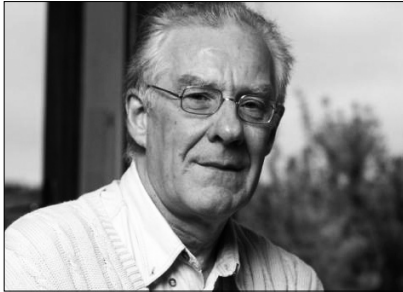
바디우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멀어졌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혁명적 변화의 문제에 주목한다.

그는 또한 프랑스에서 무슬림의 학내 스카프 착용 금지에 반대하는 등 인종 차별주의를 일관되게 반대하는 몇 안 되는 지식인 중 하나였다.

바디우 저작들의 핵심 주제는 지배적인 사상·가치·해석 등의 요소들이 각각의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이다.

여기에는 어떤 것은 부각하고 다른 것은 숨기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서열화가 포함된다.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사유재산, 소비자의 선택, 행복한 핵가족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지만, 노동자 착취, 국가 탄압, 제도화한 인종 차별과 여성 차별은 그렇지 않다.

바디우는 특정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기존 서열과 모순되는 요소들



이 어떻게 지배적인 질서를 전복하는 새로운 “진리”를 만들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모순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날 때 “사건”이 발생한다. 바디우에게 이런 “사건”은 단지 정치 혁명과 격변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 작품의 창조나 과학적 발견과도 관계있다.

이른바 ‘주체’로 불리는 사람이나 집단은 “모순적 진리”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탐구와 헌신으로 그 진리에 신뢰를 보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바디우가 1970년대에 몰두했던 마오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시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적 요소, 즉 노동계급을 대리해서 행동하는 혁명적 전위의 헌신을 통해 혁명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1980년대 노동계급과 좌파가 패배를 겪으면서 바디우의 혁명적 신념은 점차 희미해졌다. 그는 그다지 마오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이론을 표명했

는데, 특히 《존재와 사건》이라는 책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이 책에서 바디우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를 갖고 존재의 본질을 사유하려 했다. 그는 존재의 본질이 복수적일지라도 존재는 통일되고 응축된 “하나”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로] 표현되는 경향은 존재의 다중적 성격을 구현하는 요소들에 의해 약화할 수 있다.

매우 추상적인 이 이론의 주된 문제는 혁명적 주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주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바디우는 주체가 사건에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실제 내용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주체를 지속적 탐구, 헌신, “내재적 힘”이라는 개념들로 간단히 정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주체가 가진 객관적 힘과 능력을 비교 평가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종 차별주의와 실업에 분노한 프랑스 청년들의 소요를 살펴보자. 거리에서 엄청난 분노가 폭발했다. 그러나 투쟁을 어떻게 전진시킬 것인가, 국가 폭력에 직면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급진좌파 정당들과 노동조합·청년 들은 어떤 동맹을 형성할 수 있는가 등등 중요한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바디우의 이론은 우리가 이런 물음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그는 때때로 초좌파 사상으로 후퇴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태생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봤고, 좌파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했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국가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가 깔려 있다. 지금 바디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 사상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바디우의 접근법은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보여 준 접근법과 대조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운동 법칙”에 대한 추상적 이해에서 단계적으로 좀더 구체적인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타도를 좀더 용이하게 할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그가 화폐 같은 대상을 연구할 때 보여 주었듯이, 추상은 모든 과학적 탐구의 본질적 일부다.

마르크스는 화폐를 먼저 추상적 형태로 분석해서 화폐 뒤에 감춰진 착취적 사회 관계를 드러냈다.

반대로 바디우는 특별한 통찰을 많이 보여 주지만 순전히 추상적인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급진적 변화에 대한 바디우의 설명은 불충분하다.

번역 김세원

## ‘평준화 = 하향 평준화’는 허구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화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12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가 발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가 이를 증명했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언론은 초지일관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등학생의 학력을 하향화하고, ‘수월성’ 교육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강 교수는 수능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을 비교하면 학생들의 성적의 등급 분포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하향평준화’가 사실이라면 수능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8~9등급의 학생수가 가장 많아야 할 테지만,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모두에서 8~9등급의 학생수가 다른 등급에 비해 가장 적었다.

## 부모의 학력

성적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평준화 여부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 강 교수는 “부모의 학력[특히 아버지]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이 높은 수능점수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언어영역에서 “아버지 학력의 학교 평균이 높을수록 수능 8~9등급에 비해 1~2등급에 속할 확률이 무려 약 7.66배 높았”다.

또, 수능 점수의 학교 간 차이 역시 평준화·비평준화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속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상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또 다른 발표자였던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성취도가 높았다고 발표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 간 학력 격차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작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평준화 지역의 학교에 비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최대 2배 가까이 학력 격차가 발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와 보수언론에 의해 일종의 상식이 돼 버린, ‘평준화=하향평준화’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사실 강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비평준화 정책의 적합성을 지지하는 학술적 연구 결과는 흔치 않으며, 오히려 평준화 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는 누적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에 속한 학교들 사이에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도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평준화 지역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의미 있게 높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증거를 보고도 교과부 차관 이주호는 “평준화의 문제가 많이 드러난 이상 과감하게 수정하는 대안들을 많이 찾아야 한다” 하고 연구 결과를 무시했다. 그래서 평준화를 완전히 해체할 자율형 사립고를 확대하고 외고도 존속시키기로 했다.

학생들을 살인적 경쟁에 내몰 뿐인 서열화를 해체하고 고교평준화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책갈피 신간 소개

# 옛 소련 붕괴를 정확히 예측한 바로 그 책



1989년 베를린 장벽에 올라가 있는 독일 시민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들이 무너졌다. 그러자 서방의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고 자본주의만이 인류의 대안이라고 떠들어 댔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이 시장 개혁을 받아들인 지 20년이 지났지만, 경제성장과 번영을 누리기는커녕 만성적 경기 침체와 극심한 생활수준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또 옛 소련과 동유럽의 소수 특권층이던 자들이 여전히 정치·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자는 동유럽 혁명과 소련의 이행이 ‘체제 변혁’이 아니라 체제의 ‘옆 걸음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전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 사회들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유럽 혁명이 한창이던 1989년 말에 쓰인 이 책은 동유럽 혁명과 그 배경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이후 현실로 입증된 사태 전개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옛 소련과 동유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1989년 동유럽 혁명과 국가자본주의 체제 붕괴》 크리스 하먼 지음, 조정환 옮김, 192쪽, 6천5백 원

저자 크리스 하먼은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영국의 좌파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였고, 그 전 20여 년 동안 좌파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의 편집자로 일했다. 올해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한 포럼에 연사로 참가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는 대학생 단체들의 2009년 대학생 추천도서 50선에 꼽힌 《민중의 세계사》(책갈피)를 비롯해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책갈피, 공저),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갈무리),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책갈피), 《패배한 혁명 : 1918~1923년 독일》(풀무질) 등 10여 권이 있다. 미국의 유명 록밴드 RATM이 2집 앨범 〈악의 제국Evil Empire〉에서 《세계를 뒤흔든 1968》(책갈피)을 포함한 크리스 하먼의 책들을 추천하기도 했다.

제공 책갈피 출판사

# 신문 지면을 넘어서야 진짜 신문을 읽을 수 있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물질적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이 정신적 생산 수단도 통제한다”고 했다. “경제를 읽어야 정치가 보인다”는 이 책의 슬로건은 마르크스의 그 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그 슬로건에 걸맞게, 《신문 읽기의 혁명2》는 경제와 정치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신문(넓게는 언론)의 구실을 훌륭하게 규명하고 있다. 전작 《신문 읽기의 혁명1》이 신문 지면과 편집 지체에 대한 책이라면, 이 책은 ‘지면 너머’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개혁적, 진보적 언론운동의 확대로 지면과 보도에 대한 분석, 비판은 상당히 대중화됐다. 그러나, 신문 지면의 ‘토대’를 분석한 미디어 정치경제학적 저작은 한국에서는 아직 드물다. 이 책이 완전한 ‘미디어 정치경제학’ 서적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현상 분석에서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문 지면 뒤에 가려져 있는 정치경제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책의 첫째 마당에서 저자는 신문들이 정치·경제 현상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평범한 독자들의 이해관계와 상충함을 지적한다. 또한 신문 지면의 내용은 사실상 신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문 지면에 드러나는 정치-경제 현상을 연결해서 읽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신문 읽기가 시작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책은 “신문이 정치경제 현상이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문을 읽어야 한다”것을 핵심 명제로 삼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한다.

## 신문 지면의 토대 분석

훌륭한 분석을 담고 있지만, 이 책이 신문 ‘읽기’의 혁명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할 만하다. 신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문 시장의 독과점



《신문 읽기의 혁명2》 손석춘, 개마고원, 280쪽, 1만 2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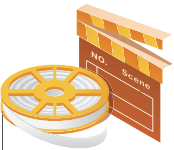
문제이며, 독과점 신문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계급적 문제임을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그에 대한 근원적 처방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아쉽게도 몇 가지 오류들 역시 발견된다. 가령 신문 읽기의 ‘황금 시대’라고 표현한 ‘진실’, ‘공정’을 담보하는 것이 각 신문의 ‘사랑’이라는 주장은 앞의 논의와도 배치될 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다. 신문들이 진실과 공정을 외면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사랑’ 같은) 도덕 관념이나 정파성이 아닌 계급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또한 신문 읽기에서의 ‘주권 혁명’ 공간으로서 인터넷 공간을 지나치게 예찬하고 있다는 점도 아쉽다. 저자가 주장하는 ‘직접 언론’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새로운 지배이기 때문이다.

책의 내용대로 따라가노라면, “신문 잘 읽고, 블로그 열심히 하자”는 실천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마땅히 사회적 공공재여야 할 언론이 자본가 계급의 ‘정신적 생산 수단’으로 기능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자본가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시나브로 젖어들게 하는 가랑비”를 잘 피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랑비를 그치게 할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자본주의적 신문 생산 시스템의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송준영



# 연말 연초에 볼 만한 DVD

## 《랑주 씨의 범죄》(1936)

감독: 장 르누아르  
출시: 피디엔터테인먼트  
1930년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악덕 사장이 도망간 후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접수하고 직접 운영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희극 영화. 올해 국내에서 회고전이 열린 프랑스의 대표적 인상파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아들인 좌파 감독 장 르누아르는 인민전선이 어떻게, 왜 붕괴할지[사유재산에 대한 부르주아의 탐욕]를 미리 예견하고 있다. 한글 자막의 엄청난 오타가 신경에 거슬리겠지만 충분히 참고 볼 만한 가치가 있다.

## 《취죽아꾼》(1999)

감독: 린 램지  
출시: 키노필름  
1973년 스코틀랜드 쓰레기 수거 노동자 파업을 배경으로, 10대 소년의 눈으로 본 당시 사회의 소외, 빈곤, 그리고 성장통을 묘사한 영화. ‘끔찍한 아름다움’이란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영화도 드물 것이다. 켄 로치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강추.

## 《레볼루셔너리 로드》(2008)

감독: 샘 멘데스  
출시: 파라마운트  
리처드 예이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1950년대 미국의 한 젊은 부부를 주인공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

등하는 한 연인이 자본주의의 압력 아래 어떻게 파괴되는지 냉혹하게 묘사하고 있다. 연말 외롭고 위안을 얻고 싶은 솔로들에게 강추.

## 프랑스 혁명을 다룬 두 편의 고전 영화

### 《당통》(1983)

감독: 안제이 바이다  
출시: 키노필름

### 《라 마르세예즈》(1938)

감독: 장 르누아르  
출시: 피터팬픽처스  
프랑스 혁명이라는 위대한 혁명을 제대로 묘사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는 극히 드물다. 보통 단두대 처형을 내세워 ‘무의미한 폭력극’에 불과했다고 폄하하기 일쑤다. 《당통》은 혁명 당시 당통과 로베스피에르의 논쟁을 중심으로 프랑스 혁명을 진지하게 다룬, 극히 드문 예외 중 하나다(로베스피에르를 다소 폄하했다는 느낌은 들지만). 1789년 혁명에서 1792년 혁명의 절정기까지를 다룬 《라 마르세예즈》는 어떤 면에서는 《당통》보다 나은 영화이지만 다소 열악한 DVD 화질과 특히 자막 때문에 아쉽게도 적극 추천하기는 힘들다.

## 당대 사회 현실에서 영감을 받은 화끈한 공포 영화들

### 《28주 후》(2007)

감독: 후안 카를로스 프레스나딜로  
출시: 20세기 폭스



### 《미스트》(2007)

감독: 프랭크 다라본트  
출시: 플레니스

### 《드레그 미 투 헬》(2009)

감독: 샘 레이미  
출시: 소니  
나는 훌륭한 정치 영화를 원하면 공포 영화 섹션을 뒤적여야 한다는 ‘비폴어진’ 소신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28주 후》와 《미스트》는 21세기 국제 정치의 핵심적 사건인 ‘테러와의 전쟁’을 가장 잘 비친 영화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28주 후》의 기본 아이디어는 H. G. 웰즈의 고전 SF 소설 《우주 전쟁》과 동일하다. 즉,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이 경우에는 이라크)에서 저지르는 일을 제국주의 본국에서 반복한다면? 《미스트》는 군산복합체의 과학 실험이 실패하면서 쏟아져 나온 사악한 생명체들이 인간들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일을 다룬 (다분히 1950년대 공포 영화에서 착안한) 영화인데, 네오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분명한 데마고들이 사람들을 현혹한다. 마지막으로, 《드레그 미 투 헬》은 아마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소재로 다룬

최초의 할리우드 영화일 것이다. 선량한 은행원이 자본가인 은행장의 압력으로 모기지를 체납한 가난한 서민의 주택을 강제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후 (주먹만한 구더기가 입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포함해) 온갖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내용이다.

## 알제리 민족해방 투쟁을 다룬 영화

### 《영광의 날들》(2006)

감독: 라시드 부샤렙  
출시: 와이드미디어

### 《친밀한 적》(2007)

감독: 플로렌트 에밀리오 시리  
출시: 엔터미디어(KBS 프리미어 영화 시리즈)  
제2차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인들에게 프랑스를 위해 싸우면 독립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영광의 날들》은 그 약속을 믿고 참전한 알제리인들이 환멸에 빠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친밀한 적》은 이상주의적인 프랑스 청년 장교가 알제리 전쟁에 참가하면서 잔인한 살인 과몰로 변해 가는 과정을 추적한, 다소 상투적이지만 볼 만한 영화다.

##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영화

### 《로나의 침묵》(2008)

감독: 장 피에르 다르덴, 뤼크 다르덴  
출시: UEK

### 《대지의 소금》(1954)

감독: 허버트 바이버만  
출시: 인권영화제 영상네트웍  
《로나의 침묵》은 체제의 압력이 어떻게 평범한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만드는지 보여 주는 우울한 영화라면, 《대지의 소금》은 1950년대 미국 광산 파업을 소재로 현지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서로 단결해 싸울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영화다. 《대지의 소금》의 제작진은 1950년대 미국의 반공주의적 매카시 선풍 당시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오른 희생자들이기도 하다.

### 《와이어》 시즌1(2002)

감독: 데이비드 사이먼 외  
출시: 워너브라더스  
가난한 마약 중독자, 마약상, 마약상의 돈을 받는 정치인, 마약상을 뒤쫓지만 부패한 정치인에게로는 쫓잡 못하는 무능한 경찰 들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역이면서,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형사물의 상투적 틀을 산산이 부술 뿐 아니라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진정한 ‘대하’ 드라마. 일부 평론가들이 “21세기 미국판 디킨스 소설”로 (정당하게) 찬양하는 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드라마는 아쉽게도 국내에는 시즌1(시즌5로 완결)만 출시돼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시즌1과 시즌5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꼭 보시라.

김용욱 기자 | ohatong@left21.com



정성진 칼럼

## ‘늙은 유럽’, ‘젊은’ 마르크스주의 — ‘역사유물론’ 대회 참가기



정성진 |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필자는 지난달 말 런던에서 열린 제 6차 ‘역사유물론’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처음에는 학술대회 발표 이외에 해외 마르크스주의 연구 흐름의 최신 동향 수집, 유명 마르크스주의 학자 인터뷰, 주요 진보 정치 단체 방문 등 다양한 스케줄을 계획했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초청 강연과 세미나 일정들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번 영국 방문은 발표와 강연만 하다가 오고 말았다. 그래서 몇 가지 인상 외에 <레프트 21> 독자들에게 보고할 것이 별로 없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역사유물론’ 대회는 같은 명칭의 마르크스주의 분야 세계 톱 저널인 <역사유물론> 편집위원회가 조직하는 마르크스주의 분야의 종합 국제학술대회인데, 2004년 1차 대회 이후 매년 가을 런던에서 개최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북미지역 대회가 별도로 개최되고 있다(‘역사유물론’ 대회에 대한 상세한 소개로는 2007년 대회에 대한 김공희 씨의 개관 <《마르크스주의연구》 11호 게재>을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제6차 대회는 2008~2009년 겨울 세계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세계는 필연적이다: 위기, 투쟁과 정치적 대안’이라는 공동주제 제목에서 보듯이, ‘준혁명적 상황’의 도래를 예상하며 야심차게 대규모로 준비됐다. 하지만 대회가 예정된 11월 말에 가까워지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진정되자, 공동주제의 취지가 감빠지게 됐고, 그래서인지 원래 참석이 예고됐던 몇몇 좌파 거물 학자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럼에도 11월 27~29일 런던대학교 ‘동양및아프리카학대학’ (SOAS)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약 2백 명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이 참석했으며(우리 나라에서는 필자를 포함해 경상대 교수 세 명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들이 3일간 총 97개 세션(그 중에는 피즐의 도이처상 수상 기념 강연, <2010 소셜리스트 레지스터> 출판기념회, 프레데릭 제임슨의 특강 등 전체 세션 3개가 포함돼 있었다)에서 약 2백 80편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토론해, 좌파 학술대회로서는 매머드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는 당연히 경제 위기여서, 10개 이상의 세션에서 이 주제가 다뤄졌다. 그 중 <소셜리스트 레지스터>지가 조직한 연속 세션, ‘위기를 기록한다’(앨보, 패니치, 사드-필호, 파인, 브라이언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에서 보듯이, 경제 위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다수였지만, 모호처럼 이번 경제 위기는 이미 종료됐으며 향후 ‘더블딥’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경제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론적·철학적으로 탐구하는 논문들이 약 20개 이상의 세션에서 발표됐다.

그 밖에 제국주의와 에너지·환경 문제도 각각 5개 이상의 세션에서 다뤄졌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여름 암으로 사망한 피터 고완과 대회 개최 직전 카이로 강연에서 심장마비로 돌연 타계한 크리스 하먼을 추모하는 세션과 캘리니코스의 <제국주의와 글로벌 정치경

제학>, 토마스의 <그람시적 계기> 등을 비롯한 주요 신간 마르크스주의 저작들의 출판기념회 등이 다채롭게 곁들여졌다.

하지만 필자는 유감스럽게도 다른 발표와 강연 일정으로 인해 ‘역사유물론’ 대회 세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가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최근 주요 성과와 핫이슈들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논의된 자리였던 것은 분명하다. 또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이들은 ‘역사유물론’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을 훑어보면, 이들이 대부분 ‘구좌파’의 낡고 오래 묵은 토픽들을 21세기적 관점에서, 특히 오늘날의 세계경제 위기 조건에서 다시 읽고 새롭게 조망하는 시도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마르크스와 트로츠키는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한때 광적인 추종자들도 한물간 것으로 거들떠보지 않는 그람시와 알튀세르가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다시 불러져 새롭게 해석되고 있었다. 이는 끊임없이 ‘포스트’를 추구하고, 새로운 외국 학자, 외국 이론을 추수하고, 따끈따끈한 신간 외국 문헌을 남들보다 먼저 인용·소개하는 것이 뭔가 새롭고 독창적인 것으로 오인되는 우리 나라 일부 진보학계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한다.

### 청년들 속에서 고조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

이번 런던 ‘역사유물론’ 대회에 참석하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석자들 다수가 상당히 젊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1994년 가을 뉴욕에서 열렸던 <과학과 사회>지 주최 ‘레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참석자들 대부분이 꽤 늙었다는 기억과 대조되었다(물론 이와 같은 대조적 인상이 필자가 그 사이 늙은 탓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실제로 이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조직·운영하는 이들 다수는 지금 막 전임강사(lecturer)가 됐거나 아직 박사과정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이었다.

이번에 필자를 초청한 <역사유물론> 편집위원 캠핑로드 <역사유물론>지의 창간 주역들은 당시 중진 유명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이 아니라, 1997년 창간 당시 대학원생들이었다고 확인해 줬다. 요즘 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다시 ‘회춘’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

찰이 그다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늙은 유럽’에서, 특히 이번 세계경제 위기에서 한때 초토화되다시피 한 세계 금융의 중심지 런던 시티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과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청년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은 고무적이었다.

필자는 이번 방문 중 퀸마리대학 경영대학원에서 ‘발전이론과 마르크스주의’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는데, 이런 마르크스주의 강좌가 런던의 유명 국립 경영대학원에 개설돼 있다는 사실, 또 이 경영대학원 교수 중 상당수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보수 우익과 황금만능주의의 독무대인 우리 나라 경영대학 교수들이 이 사실을 알면 경악할 것이다.

### 시차

한편, 이번 ‘역사유물론’ 대회에서 구미 좌파 학자들이 발표하고 토론한 주제들 중 대부분이 우리 나라 진보진영이 고민하는 익숙한 주제들이었다.

또 우리 나라에서 이미 모두 번역되어 좌파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는 아리기와 하비, 브레너의 책들을 구미 좌파 학자들도 현재 주된 토론거리로 올리고 있었다. 이로부터 필자는 우리 나라 진보진영과 구미 좌파 이론 진영 간의 시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번 방문 중에 만난 SOAS의 사드-필호 교수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의 경상대가 마르크스주의 연구와 교육을 특성화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것을 두고서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높이 평가하고, 자신들도 한국의 사례를 모델로 해서 마르크스주의 전공 독립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서 보듯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 진보진영이 구미 좌파보다 앞서 나가는 분야도 있다.

또 필자는 이번 방문 중 만난 몇몇 마르크스주의 발전이론 연구자들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경험에 기초해 수립된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이 이제는 중국과 인도의 고도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나아가 구소련·동유럽 및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나라들의 경제발전 모델로 제시되는 등 발전이론의 새로운 지배적 패러다임 또는 연구프로그램으로 정착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과 논쟁이 국제적 규모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1세기 세계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우리 나라 진보진영에 주어진 당면한 긴급 과제는 다름아닌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 특히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을 연구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이번 런던 방문에서 진보진영 관련 정보 자료를 많이 수집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필자 개인적으로는 마르크스가 살고 공부하고 묻힌 소호 거리와 대영박물관, 하이게이트 묘지를 둘러본 것, 무엇보다 구미의 젊은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로부터 ‘기 받고’ 온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고 자위하며 귀국길에 올랐다.

## 논설

# 민주당과 독립적으로 MB 공세에 맞서야

지난해 촛불항쟁의 불길에 크게 댄 이명박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올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 달라는 재벌과 부자들의 요구는 강력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올 초부터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대졸 초임 삭감을 감행했다.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는 “문제는 속도전이고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새해 벽두인 1월 20일 새벽 용산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촉발한 강력한 저항은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를 사퇴시켰다.

상반기에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자신감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었다. 그것은 4월 울산 재보선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의 당선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김상곤 후보의 당선에서 드러났다.

이 상황에서 노무현 자살과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의 자결 등은 저항의 불씨가 됐다. 박종태 열사는 유서에서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거나 고분고분 노예로 살라고 [한다]”고 이명박 정부를 폭로했고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대접 받[자]”고 투쟁을 선포했다. 노무현 죽음은 이명박 정부 아래 파악해지는 삶에 고통스러워 하던 대중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당시 분노의 열기는 시청광장에 10만여 명이 모인 6·10 대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교수, 학생, 종교계, 문화계로 시국선언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갔다.

하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이명박은 7월 말에 언론악법 날치기를 감행했다. 그리고 곧바로 쌍용차 살인 진압을 시작했다. 억압적 국가기구들의 힘과 신경이 쌍용차로 집중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없었지만 영웅적인 저항은 큰 파장을 남겼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혀 일관되게 이명박과 맞서지 않았다. 용산 참사 항의 투쟁이 언론악법 저지 투쟁과 연결되던 3월 2일에 민주당은 ‘언론법을 1백 일 후 포결 처리한다’며 한나라당과 야합해 버렸다. 6·10 이후에도 곧바로 한나라당과 물밀힘상을 시작한 민주당은 노무현 49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등원했고, 한나라당과 사이좋게 레바논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7월 22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때도 민주당은 어정쩡하고 아리송한 태도를 취했다. 쌍용차 파업 때도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중재단을 구성해 노조에 양보 압력만 넣었다.

### 밀린 숙제하듯

10월 재보선을 전후해서 친서민 중도 가면을 벗어버린 이명박 정부는 현재 세종시, 4대강, 예산안,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아프가니스탄 파병, 공기업 선진화와 단협해지 등 동시다발적 개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이 자신감이 높아져서도 지지기반이 탄탄해져서도 아니다. 밀려 있는 과제의 중압감 때문이다. 이명박은 올해 초부터 추진했던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이나 온갖 MB악법들 중 언론악법을 제외하곤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밀린 숙제하듯 밀어붙이는 개악들은 현재 곳곳에서 충돌을 낳고 있다.

더구나 현재 경기부양의 거품 위에 지탱하는 한국 경제의 상황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거품을 키우기 위해 돈을 쏟아 붓다가 생긴 막대한 재정적자다. 한국 경제는 이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다. 출구전략을 선택해 증세나 지출 삭감으로 재정적자를 통제하다가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반면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판이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부자 감세와 4대강 살집을 계속하면서 경제 위기 고통전개 공격을 더 강화할 것이다. 물론 고통전개에 맞서려는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 두기 위해 민주주의도 공격할 것이다. 비정규직법 개악, 정리해고 유연화 개악 등과 함께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공공 부문 구조조정(민영화, 임금 동결, 인원 감축)이 계속될 것이다. 이 모든 공격들은 강력한 저항과 격렬한 충돌을 낳을 것이고, 이 때문에 ‘제2의 용산’, ‘제2의 쌍용차’ 같은 일들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때마다 민주당은 일단 처음에는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 최근 민주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고는 파병 반대 결의안에 불참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명박과 대결에서 민주당과의 동맹이 아니라 대중투쟁 건설에 중점을 뒀야 한다. 대중투쟁 속에서 이명박의 반민주적 정책에 맞서는 투쟁과 고통전개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싫지만 민주당도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는 진보진영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 (주)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意的안 국무회의 통과, 그러나

# 국민의 다수가 파병을 반대한다

오바마의 증과 결정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향해 거침 없이 나아가고 있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은 11일 국회로 넘어갔다.

그간 말 많았던 파병 규모는 최종 3백 50명으로 확정됐다. 최근 추가 파병을 결정한 비(非)나토군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파병 기한은 그간 국회에서 1년마다 동의를 구해 왔던 전례를 깨고 파격적으로 2년 6개월로 늘렸다. 매년 국민 눈치 보는 것도 번거롭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국무회의에서 “파병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 재건팀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지만, 파병군의 무장 수준을 보면 ‘재건’과는 거리가 멀다. “대당 10억 원에 이르는 특수장갑차량(MRAP) 10여 대를 임차 또는 구입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의 중이며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UH-60 헬기 4대도 파견한다. 또 K-11 차기복합소총과 81밀리미터 박격포, K-6 중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할 계획이다.”(〈조선일보〉 12월 9일치)

또 국방부가 파병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전체 4백40억 원 중 방위력 개선비만 2백40억 원이다. 이명박의 말과는 반대로 “재건팀”은 간 데 없고 “전투병”만 남은 셈이다.

파병지로 확정된 파르완주도 “안전하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껏 이곳에서 전투 중 사망한 나토군만 46명에 이른다.

탈레반은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에 반하는 것이

며 동시에 2007년 19명의 인질을 풀어준 데 대한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나쁜 결말”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많은 국민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는 것 같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고,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탈레반의 경고가 빈말이 아님은 이미 삼환기업 노동자들의 사례가 입증해 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건설 시공을 하고 있는 삼환기업 노동자들은 “1주에 1~2회 탈레반에 의한 박격포 공격이 있고 [정부의 파병 발표가 있었던] 최근 더욱 잦아졌다”고 증언한다. “운이 좋아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파병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위험을 핑계로 이주노동자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들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10개국 75명의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경철청장 강희락)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코리아”란 지역민리 땅에서 총칼로 그 나라 민중의 저항을 짓밟고, 전 세계 평범한 한국인들을 ‘테러’ 위협에 빠뜨리고,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속죄양 삼는, 그런 나라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는 국민들이 다수라는 사실이다(“아프가니스탄 파병 재검토해야” 47퍼센트, 반면 “긍정적”은 30퍼센트, 12월 7일 리얼미터 조사).

반전평화 세력은 이런 국민적 지지에 바탕해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좌절시킬 대중 운동을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조명훈 기자 | jomh@left21.com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글로벌 코리아’?

사진 임수현

다함께의 이론지

마르크스21 3호

3호(2009년 가을호) 목차

특집 21세기 한국 좌파의 전망 \_최일봉 & 정태석

쟁점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_전지윤  
여성 운동의 주요 쟁점들 \_정진희

일반 이론 심층 탐구  
억압과 마르크스주의 \_애비 바칸  
미르크스의 소외론 \_주디 콕스

사료 분석  
민정우의 NL 노선 재구성 시도 \_김하영  
새사연의 경제 분석과 대안 \_강동훈  
우석훈과 사회적 경제 \_이상우  
칼 폴라니 사상에 대한 비판적 평가 \_이정구

실천을 돕기 위하여  
혁명정당과 민주주의 \_알렉스 캘리니코스  
초기 신좌파의 마르크스주의 \_폴 블랙레지

서평 박노자의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_정병호  
이광일의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_이종길

가격 17,000원

구독 신청 문의  
Tel 02-2271-2395 / Fax 02-2271-2396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 있는 책(신촌)  
동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명박의 노조 탄압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거의 린치 수준”이고 “살기가 느껴”질 정도다.

교과부는 최근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이어가는 한편, 징계자들의 노조 전입활동을 불허해 활동가들의 썩을 잘라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안부도 전공노에 대한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집회참가 원천봉쇄,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 불허, 징계 확대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아예 전공노 법원본부가 전공노와 철도노조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빼돌렸다며, “중대한 범죄”를 일삼는 “공무원 노조를 계속 존속시킬 것이냐”고 다그쳤다.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고베 빠진 노조탄압 범죄 행위를 묵과하지 않는 게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양심적 행동일 텐데 말이다.

정부는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조에 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유독 전공노와 전교조에게만 매년 개별 조합원들의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노조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최근 합법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파면·해임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의 총견인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신혼여행 중이거나 병가 중인 노동자까지도 직위해제 시켰다.

이에 뒤질세라, 노동부 장관 임태희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조차 무시한 채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의 탄압은 어찌나 막무가내인지 거의 발악에 가까울 정도다. 구조조정과 노동자 쥐어짜기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정부와 보수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국가를 뒤흔드는” 것이라고며 정치투쟁에 대해 극심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과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배자들은 ‘정치투쟁은 불법’이라는 주문이 언제나 노동자 투쟁을 단속하는 방망이로 통하길 바란다. 하지만 올해에도 언론노조 파업, 쌍용차 파업, 철도 파업 등 굵직한 노동자 투쟁이 작업장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투쟁으로 발전하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시켰다. 언



전공노·전교조 위원장의 공동 항의 농성

사진: 새금당 창당의 소리

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 폭탄’ 들을 늘려가며 위기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명박은 이런 투쟁의 재현과 발전을 기필코 막고 싶어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은 경제 위기, 재정적자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투쟁의 구실을

약화시키려고 안달이다.

노동부가 최근 2010년을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공공기관이 협력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그토록 전공노·전교조 탄압에 열을 올리며 공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00m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대전 | 매주 금요일 오후 7~8시  
갤러리아 타임월드 뒤 버스정류장 앞

원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을 부르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조 전임자 수가 많을수록 파업 발생률이 높다”(한국경제연구원)는 우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노동기본권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악 반대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전공노·전교조 등에 대한 방어에 적극 뛰어들 필요가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가 공동 농성으로 연대투쟁을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런 단결 시도를 강화하면서 조합원 총회 등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항의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탄압이 거세기는 하지만, 적당히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들의 정치 활동 비난에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 논박하고 행동을 조직할 때, 조합원들도 위축되지 않고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박설 다함께 노동조합팀